

한국경제학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세미나

한국경제 혁신을 위한 정책방안

■ 일 시

2014년 2월 13일(목), 14:00~17:10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중회의실(B)

■ 주 최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국민경제자문회의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 후 원

 대한상공회의소

인사말

<새 정책 패러다임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위기를 극복해야>

우리는 지금 세계 역사상 경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른 시대에 살고 있다. 글로벌 IT 시대에 글로벌 네티즌은 한 지붕 밑에 살고 있다. 매일아침 저녁으로 쏟아져 나오는 세계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아가고 있다. 세계 어느 구석이든 웬만한 큰 사건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대응조치도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이 빠르게 실시되고 사건은 마무리 된다.

요즘 나라 안팎으로 일어나는 경제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예전 글로벌 경제위기는 먼 산 불구경거리였으나 지금은 뉴스가 전해지자마자 그 불이 국내에 옮겨 붙어버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불을 꺼야하는 시대가 되었다. 2월 3일 ‘헬리콥터 벤’으로 불리던 벤 버냉키를 승계한 미국의 새 연준 의장 엘런의 취임과 함께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에도 그 불뚝이 튀어올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다른 글로벌 뉴스에 시달렸고 전전긍긍해 했다. 우선 “미국경제가 살아야 세계경제가 산다.”라는 전제 하에 미국은 지난 4년 간 3차례에 걸쳐 비전통적인 QE (양적완화) 통화확대정책으로 4조 달러를 세계에 풀었다. 이제는 미국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달러 인플레이를 염려하여 점진적 통화감축을 위해 Tapering (양적완화축소) 정책을 시작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흥국에 투자되었던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신흥국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 문제에 완전히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지난해 10월 1일 미국 정부는 가동을 멈추었다. 미국의 예산통과를 놓고 미국 의회 내 공

화당과 민주당 간의 합의가 무산되어 미행정부가 약 2주 동안 폐쇄되면서 글로벌 네티즌들은 속을 끓여야만 했다. 일본도 지난 20년간 저성장과 실업으로 재정이 거덜이 났으며 여기서 벗어나려고 미국이 한 것처럼 엔화를 무진장 찍어내는 일본식 QE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자국화폐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로서 자유경쟁시장 자본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자유진영의 대표적 국가이다. 일본식 QE를 실시하는 아베노믹스는 당장 한국의 수출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경제는 중국경제의 활성화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우리의 무역구조는 대중국 수출에 쏠려있다. 대일본무역은 적자이나 대중국무역과 대미국무역은 둘 다 흑자이다. 지난해 600억 달러 수준의 무역흑자는 거의 중국 덕분이다. 우리의 총수출에서 대미국 수출은 10%에 불과하나 대중국 수출은 30%나 된다. 이번 신흥국 금융위기에 그나마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속적 무역흑자 덕분이다.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체제이나 경제적으로는 시장자본주의체제를 가진 매우 특이한 나라이다.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경제규모가 제일 크다. 공산당 정부가 경제를 끌고 가고 있으며 정부지원으로 기업들은 불확실한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정부보증과 경제 원조를 병행함으로써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세계 자원부국을 경제적으로 공략하여 희소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중국은 지금 4조 달러에 가까운 외환보유자산을 가진 경제대국으로서 자신만만하게 세계경제를 끌고 가고 있다.

한편 우리경제의 내부 사정은 어떤가? 우리 경제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성장 동력을 잃음으로써 저성장 고실업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과 같은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비로소 국내 경기는 침체국면에서 탈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창조경제, 일자리 확대, 중산층 복원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이의 성과가 체감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사안에 있어 거의 모두,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민생경제를 살릴 법안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우리 경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가 없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남은 4년을 보내게 되면 우리경제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 정치인들을 원망만하고 가만있으면 우리경제는 그대로 가라앉는다. 재정정책 추진이 현 상황에서 여의치 못하면 금융정책에 더 의존해야 하

는데 금융정책 추진도 만만치 않다. 태생적으로 불안한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제도 하에서 글로벌 제로금리, 불안한 환율변동도 원활한 금융통화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정에 달한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에 자유시장경제가 주요 경제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시대에 시장만 믿고 손을 놓고 있으면 시장은 힘센 기업과 독점기업의 독무대가 되고 약육강식이 판을 칠 것이다. 특히 국내자본시장은 글로벌 자본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할 것이다. 그 결과 우리경제는 출렁이는 세계경제의 격랑 속에서 표류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절정에 달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싸우려면, 한편으로는 시장기능에 기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개입하는 스마트한 정부의 선제적 액션이 필요하다. 우리경제는 이미 잠재성장률 3.8% 이하의 저성장을 몇 년 째 계속하고 있다. 2010년 연말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은 6.3%였다. 그러나 2011년에 3.7%로 급강하 했으며 이어서 2012년에는 2.0% 바닥을 내리쳤다. 다행히 작년 2013년에 2.8% 성장률을 기록했다.

1997년 외환위기 전 한국은 고성장국이었다. 1962-1996년 기간 동안 7차례의 5개년 경제계획을 실시함으로써 연평균 7.5%를 성장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기반이 무너졌고, 그 후로부터 저성장국으로 전락했다. 성장률이 2001-2007년 기간에는 연평균 4.7%, 2008-2011년에는 연평균 3.2%, 2012년에는 2.0%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작년 2013년에는 2.8% 성장했다. 이제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져서 과거처럼 7% 성장은 어렵다고 해도 잠재성장률 이하의 3.0% 성장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국경제가 규모가 작아서 얼마 전까지 10% 이상 성장을 한 것은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통상 외교 분야에는 유권자들이 비교적 좋은 점수를 주고 있으나 경제정책 분야는 노력만큼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에 대해 소모적 논란이 가열되었으며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예산상의 제약문제로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공약의 실시에 많은 차질이 빚어 졌다. 여야 간의 대립으로 주요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민생법안도 덩달아 처리되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실망과 불안이 쌓여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한해를 보내면 우리경제는 저성장 함정에 빠지고 모든 국민이 불행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경제부처는 지금까지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대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데다, 지금처럼 여야 간의 격심한 정치적 갈등과 정책적 대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시장이 현안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상명하달식의 후진국 형 5개년 경제계획 방식을 택할 수는 없다. 정보의 비대칭, 외부불경제, 글로벌 불확실성이 만연해 있을 때에는 정부의 스마트한 개입이 필요하다. 필요한 최신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미래의 경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업가의 투자심리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남아 있는 기간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를 결정하고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한 부처 간의 이해와 협력은 필수이다. 정책목표를 확정할 때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토론, 부처 간 조정 및 협력을 얻어내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IT시대라 절차를 밟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관료의 희생적 노력이 필요하다. 항상 낮은 자세로 그러나 높은 경륜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게 안 되어 있으면 모든 경제혁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한국경제학회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 인 철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한정택입니다.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김정식 경제학회 회장님, 그리고 발제자, 토론자,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해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경제는 그간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고 건실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을 지속하기엔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하고, 신흥국 불안이 대두되는 등 대외환경이 불리하게 변화하는 동시에, 안으로는 내수부진, 중국 등 후발주자의 추격으로 주력산업의 성장 동력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경제가 예전과 같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 핵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강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최근의 어려움들이 이전과 다르게 인구구조,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등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해 있는 점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경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이러한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한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하기 위한 주요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이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는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 발전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3개년 계획의 충실한 수립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 흔들림 없는 일관된 집행이 어우러진다면, 대한민국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넘어,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혁신 계획 중 가장 중심은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무엇보다 정당한 노력이나 창의성 없이 인위적 공급을 제한하는 경제적 지대 추구(rent-seeking) 행위는 사회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훼손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공기업이 경쟁제한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보장하려는 관행이나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이 유능한 인재의 진출을 가로막는 제도로 변질된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이 성과로 보상받는 공정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유망직종인 의사, 변호사 등의 교육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대학정원 제도나 각종 협회나 단체를 통하여 산업, 직업의 신규진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업종별 칸막이를 철폐함으로써 경제적 지대 추구행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을 비롯한 민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정부 규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민간이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행위를 자유롭게 누리면서 성장의 뿌리가 되는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각 개인에 잠재되어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새로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조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고, 성장의 파급효과가 높은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튼튼한 내수를 확보한다면 보다 한국경제가 보다 건실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그간 한국경제가 해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국제경제 환경을 활용하고, 경제체제를 글로벌 규범에 맞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과 대서양무역투자협정(TTIP)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핵심 허브(Hub)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제일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한중 FTA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TPP 협상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제혁신은 우리 경제체질 전반을 재정비하는 일인 만큼 계획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반발과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확실한 개선약속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고, 흔들림 없는 의지로 이를 집행한다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도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한국경제 혁신의 밑거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여러 불리한 대외적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혁신과 대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현 정택

프 로 그 램

등 록 (13:45~14:00)

행사진행 이현대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장, 경기도)

개 회 식 (14:00~14:15)

개 회 사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인하대)

환 영 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조연설 : 한국경제의 현안과 과제 (14:15~14:45)

기조연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 차기회장, 연세대)

주제 토론 사 회 :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14:45~17:10)

시 간	토 론 자
14:45~15:50	세션 I : 한국경제진단과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과제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 이 근 (서울대 교수) 김종석 (홍익대 교수) 이종화 (고려대 교수)
15:50~16:05	Break
16:05~17:10	세션 II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동근 (대한상공의소 부회장)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폐 회 (17:10)

목 차

• 기조연설 : 한국경제의 현안과 과제	1
김정식 (한국경제학회 차기회장, 연세대)	
• 토론문	27

[기조연설]

한국경제의 현안과 과제

2014. 2. 13

김 정 식
(연세대 경제학부)

한국경제학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의 현안과 과제

2014. 2. 13

김 정 식
(연세대 경제학부)

1

I. 한국경제여건의 변화와 제도개선

2

1. 한국 경제여건의 변화

- **대내적 변화 :**

- 저성장, 저물가 국면 지속 : 낮아지는 잠재성장률
- 산업구조 변화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 고령화 : 복지수요의 증가와 노후의 불안

- **대외적 변화 :**

- 미국의 출구전략과 아베노믹스
- 자본자유화 :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 저하 및 갑작스러운 자본유출(sudden stop)에 의해 외환위기 위험에 노출
- 중국의 등장 : 위안화 국제화 및 주력산업의 이전 : 실업의 증가
- 역내 무역자유화 : FTA 혹은 TPP로 무역시장의 변화

3

2. 변화에 부응한 제도개선 및 정책변화 필요

-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저성장 기조의 정착으로 재정적자, 국가부채 문제 발생 : 경제위기 발생
-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 (Reshaping) 혹은 정상화와 새로운 성장전략 필요
- 이익집단 때문에 제도개선 어려움
- 단계적인 추진 필요 : 3-5개년 계획

4

II. 한국경제의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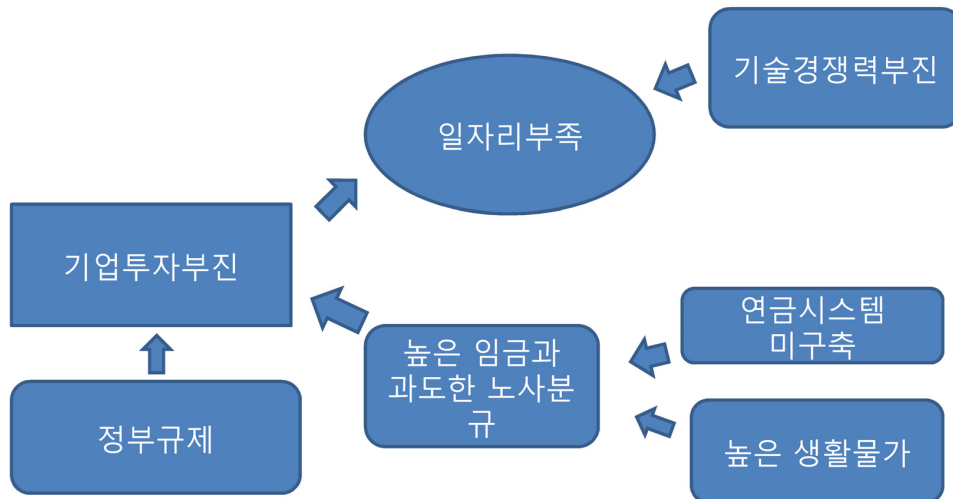
5

1. 내수 부진과 일자리 부족

-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해 1)금리인하 2)법인세 인하 3) 정부규제완화 4)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및 경제민주화 추진
- 기업설비투자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 청년실업에 40-50대 조기퇴직까지
-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약화
- 신 성장동력 부족
- 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과 과격한 노사 분쟁이 주된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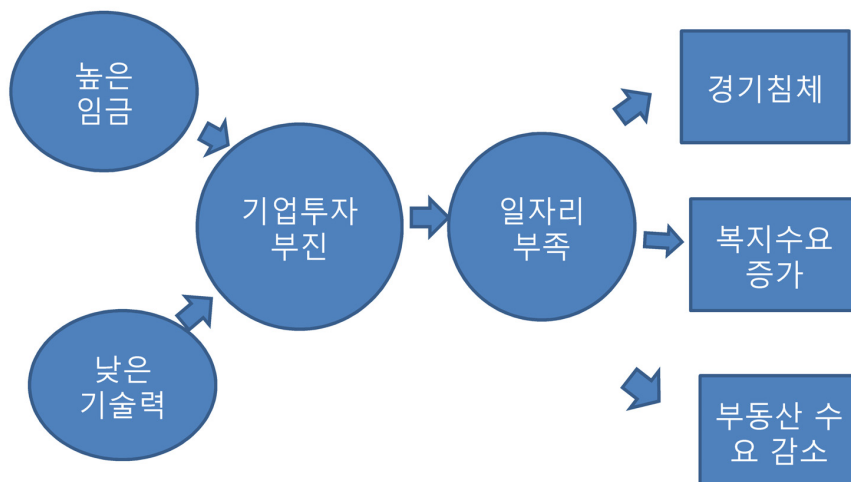
6

일자리 부족의 원인



7

일자리 부족의 영향



8

높은 생활물가

- 소비자 물가는 안정적
- 식탁물가등 생활물가가 높아 임금상승의 원인임

9

2. 장기적 저성장 기조 정착

- 기업투자 부진과 출산율 저하(1.18명)로 잠재성장률은 현재 3% 후반대에서 2020년대에는 2% 후반대로 하락 전망
- 제품라이프 사이클 가설에 의해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등 주력산업의 점차적 중국이전 전망

10

서비스 및 금융산업의 낮은 경쟁력

- 금융산업은 국부창출 산업
- 경상수지 흑자로 창출된 국부가 외국인 금융투자수익증가로 유출되어 국부창출이 되지 않음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금융인력양성을 등한시 함 (장기적인 경영 전략 부재)

11

한국의 기간별 평균성장률

연도	경제성장률(%)
1960-1969	8.46
1970-1979	10.16
1980-1989	8.64
1990-1999	6.68
2000-2009	4.43
2010-2012	3.96
2012	2.00
2013	2.90(추정치)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2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

	잠재성장률
2010-2019	3.6% 내외
2020-2029	2.5% 내외
2030-2039	1.5% 내외

자료 : KDI,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13

3.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증가

- 일자리 부족으로 생계형 가계부채 증가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155%로 OECD 평균인 135%를 상회(세계 9위)
- 국가부채는 정부부채의 경우 GDP 대비 35%로 양호하나 공기업부채 포함시 70%를 상회하여 기준치 60%보다 높아짐
- 공기업부채 관리 필요
- 일자리 부족시 복지수요 증가로 국가부채 급속히 증가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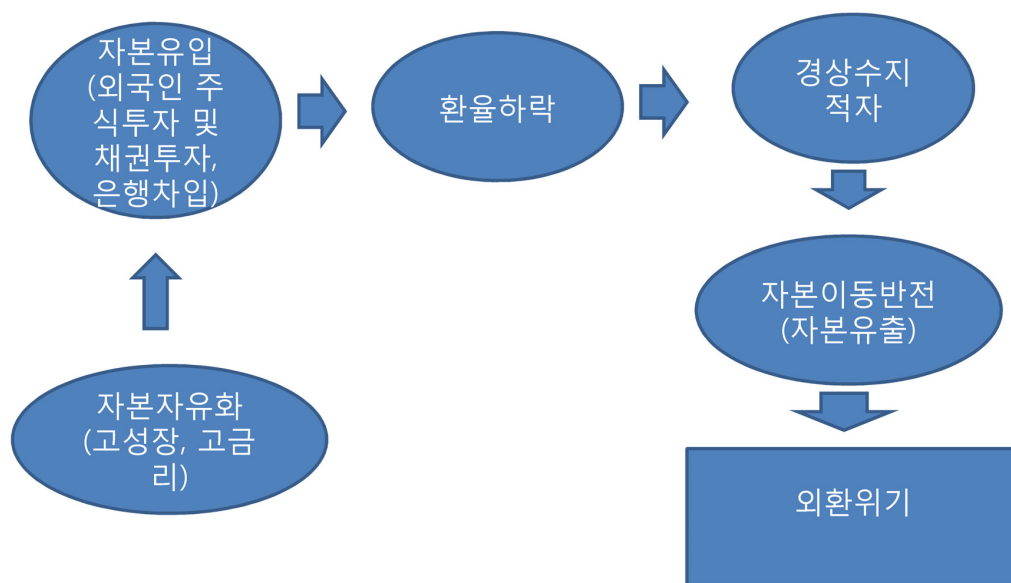
14

4. 자본자유화와 구조적 외환위기

- 선진국보다 금리와 성장률이 높아 과도한 자본유입(surge) 발생 → 환율하락
→ 경상수지 악화 → 갑작스러운 자본유출로 외환위기 발생
- 1) 자본자유화 2) 소규모 개방경제 3) 높은 무역의존도 4) 비교환성 통화를 가진 국가에서 변동환율제도 선택시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이 저하됨

15

자본자유화와 구조적 외환위기



16

III. 한국경제의 과제

17

1. 내수활성화 방안

18

(1) 기업투자 활성화 : 연금체제 구축해서 노사분규 줄여야

- 연금체제 구축 집단 : 공무원, 교사, 군인
- 국민연금 : 최고 월 120만원
- 고령화로 연금수요 증가 : 국가부채 증가 및 임금인상과 과도한 노사분규 발생
- 해결책 1 : 민간연금 체제 구축 : 정부지원 필요
- 해결책 2 : 정년 연장 및 기업투자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19

(2) 초임과 피크타임 임금격차 줄여야

- 대만과 홍콩 및 일본에 비해 초임 높음
- 초임과 피크타임 임금 격차가 선진국보다 높음
- 조기퇴직 방지 혹은 퇴직연령 늦출 수 있음
- 기업투자가 확대됨
- 연금 및 복지수요 줄일 수 있음

20

(3) 직업훈련 강화와 정부규제 완화

- 전직이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요가 많은 업종으로 전직을 위해 직업훈련 강화 필요
- 직업교육 위주로 현재의 대학 교육체제 변화 필요
-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과도한 기업투자 정부규제 완화 필요

21

(4) 통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 저성장, 저물가에 적합한 통화정책 필요 : 미래 통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서 금리정책의 불확실성 해소해서 기업투자 유도
- 미국 실업률 6.5%까지, 일본 물가상승률 2%까지 양적완화정책 실시
- 전략적 통화정책 : 미국과 일본등의 통화정책을 고려해서 정책수립 필요
- 환율정책과 공조하는 통화정책

22

(5) 생활물가 및 주택가격 안정

- 식탁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점진적 개선 :
현재 농산물 유통은 기획재정부, 산업부, 농수산부로 분산됨 : 총괄기능을 하는 유통위원회 설치 필요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해야 :
급행 지하철 체제구축 및 부심과 도심사이에 지하철 건설 : 주택과 교통망은 결합재
- 주택비분양 해소시킬 수 있으며 주택경기 부양 및 전세가격 안정시킬 수 있음

23

2. 신성장동력 확보방안

24

(1) 과학기술인력양성과 중소기업 기술력 지원

- 제조업의 매몰비용이 높아 직업의 안정성이 높음
- 서비스업과 더불어 제조업 중요성 간과해 서는 안됨
-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지원으로 경쟁력 향상
- 과학기술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가도록 유인제공 필요 : 이공계대학 장학금 확대등
- 주력산업의 중국이전을 늦출 수 있음

25

(2) 미래성장동력 육성계획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산업정책의 중요성 재부각
-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필요
- 한국경제의 밝은 미래 전망으로 기업투자가 확대될 수 있음
- 기업투자는 현재여건은 물론 미래전망에 의존함

26

(3) 서비스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 국부창출 : 내수, 수출, 금융투자
- 자본자유화로 금융부문에서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금융산업경쟁력 강화필요
- 저성장으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확대추세 : 투자수익을 내기위해 필요
- 금융인재 양성해야
- 건전도 평가시 BIS 비율외에 (교육훈련비/경상비) 고려 필요

27

3. 국가부채 관리방안

28

(1) 국가부채 규모

- 정부부채 : GDP의 35% 양호
- 공기업부채를 포함하면 100% 까지 상승가능 : 경제위기 초래 (60% 이상이면 위험)
- IMF 국제기준 : 공기업부채 포함
- 공기업부채 = 방만경영부채 + 투자성부채
- 혼재되어 구분이 어려움, 투자성부채규모가 커서 경영부실부채는 간과함

29

(2) 공기업 부채의 위험성

- 공기업 구조조정 → 공기업 민영화 → 공기업 선진화 → 공기업 정상화
- 공기업 선진화 : 해외투자에 의한 수익창출
- 투자성 부채와 부실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 있음
- 자원관련 공기업의 주업무 : 자원탐사, 자원비축 : 자주개발을 제고를 위해 자원생산에 참여 : 투자성 부채 급격히 증가함
- 투자부실로 부채증가
- 자주개발율 = (해외 자원생산량 / 자원수입량)

30

(3) 공기업부채 관리방안

- 경영부실 :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경우 예산감축 및 인원감축 필요
- 경영평가 강화
- 투자부실 : 투자실명제, 책임제 도입 (도적적 해이 해소)
- 공기업의 역할 재정립 : 민간기업이 하지 않는 업무 한정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님)
- 수익창출을 위한 투자사업 정리 : 투자지분 정리 및 매각

31

4. 미국의 출구전략과 금융불안 해소 방안

32

(1) 미국의 출구전략

- 월 850억달러 채권매입을 1월부터 월 100억달러씩 축소
- 미국 경제성장률 작년 하반기 3.4%이며 올해 2%중반 전망
- 실업률 6.6%로 6.5%에 근접, 물가는 1.5%수준으로 2.5%에 미달
- 출구전략 가속화시 세계경제 금융불안 확산가능성
- 동유럽 및 서유럽국가의 성장률 1%미만이며 경상수지 적자국가 많아 취약
- 자원가격 하락으로 자원수출국 경제취약 : 금융불안 확산가능성 높음
- 한국의 대 신흥시장국 수출비중 40% 이상
- 실물경기 침체시 금융부실 증가로 금융위기 우려됨
- 경상수지 흑자폭유지 + 내수경기 부양 필요

33

(2) 자본유출로 인한 외환위기 대응방안

- 비교환성 통화를 가진 국가의 특수성 인식 필요 (선진국과 차별화 중요)
- 과도한 자본유입 규제 필요
- 김정식(2013) : 과도한 자본유입이 갑작스러운 자본유출의 원인임
- 외환보유고 확충 필요

34

(3)일본 아베노믹스에 대비한 적정환율 유지 필요

-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대외건전도+ 대내건전도 유지 필요 : 대외건전도 유지를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폭 유지 필요(GDP 5%내외) : 수출을 위한 적정환율 유지해야
- 아베노믹스로 인한 일본 엔화의 가치변동을 고려한 적정환율 유지 필요 (일본과의 수출경쟁관계를 고려해야)
- 일본 엔화가 과도하게 평가절하될 경우 한국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악화로 외환위기 초래 (1997년과 2008년)
- 미국 금리인상 시기(1994.1-1995.6), (1999.1-2000.12), (2004.6-2007.6) 기간 중 일본엔화는 한국원화보다 더 큰 폭으로 평가절하 함 : 1997년과 2008년 한국 외환위기 경험

35

미국의 금리인상과 원/달러 환율추이



36

미국의 금리인상과 엔/달러 환율추이



37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추이



38

(4)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의 조합

- **저금리 + 저환율정책** = 물가안정 + 강력한 내수부양 + 경상수지악화로 외환위기(1993년-1996년 **김영삼정부** 실시)
- **저금리 + 고환율정책** = 물가상승 + 완만한 내수부양 + 수출증가 + 경상수지 흑자(**이명박정부** 추진 : 원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실패 : 원유가가 높은 경우 고물가로 인해 사용할 수 없음, 그러나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경우 실시 가능함)
- **고금리 + 고환율정책** = 물가 중립적 + 내수침체(구조조정) + 수출증대 + 강력한 경상수지 흑자(1998년 외환위기 이후 IMF 권고로 **김대중정부** 실시)
- **고금리 + 저환율정책** = 물가안정 + 내수침체 + 수출감소 및 수입증가 + 경상수지 악화로 외환위기 가능성 높음(한국은행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 **김영삼정부**가 외환위기 직전 사용하여 외환위기 초래됨)
- 현재는 원유 및 국제원자재 가격과 국내물가가 안정되어 있고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이므로 (**저금리 + 적정(고)환율정책**) 사용이 바람직함

39

IV. 정책제언

40

정책제언(요약)

- 거시경제여건 : 미국의 출구전략+아베노믹스+신흥시장국 금융불안+내수침체(저성장)+물가안정
- 정책 목표 : 경상수지 흑자유지(자본유출 막고)+ 내수부양(기업부실 막기 위해) 필요(저성장으로 물가는 안정되고 있음)
- 정책수단
 - 과도한 자본유입규제 (적정환율 유지)
 - 저금리 + 적정(고)환율정책(내수부양과 경상수지 흑자유지)
 - 내수확대와 일자리 창출
 -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규제 완화(내수확대)
 - 금융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 직업훈련 강화
 - 임금인상 억제 및 연금체제 구축으로 고용증대 추진
 - 창조경제 구체화
 - 기술혁신으로 기업투자 유도(창조경제)
 - 미래성장동력 확보
 - 공기업부채 감소 추진 : 공기업 정상화
 - 예산 및 인원 동결
 - 투자실명제 및 책임제
 - 경영평가 강화

41

감사합니다.
kimjs@yonsei.ac.kr

42

토 론 문

[세션 I]

한국경제진단과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과제

우리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책대응

KDI 김주훈

- 우리 경제는 공급과 수요 모든 측면에서 지난 50년간의 성장패러다임과 다른 국면으로 진입
 - 과거에는 자본의 수익성이 높아 투자가 왕성하였고 고도성장을 실현. 그러나 투자기회의 저하로 자본의 수익성이 하락
 - 과거에는 선진국에는 이미 보급되었으나 국내 도입이 되지 않은 제품들의 생산으로 투자기회가 높았으나
 - 앞으로는 선진국조차 시장에 나타나지 않은 혁신에 의해 투자기회가 생성되는 수준
 - 그에 따라 성장의 어느 정도 둔화는 수용할 필요
 - 인적자원에 대한 역할이 과거 노동력에서 지식기반으로 변화이에 따라 인적자본의 형성에 대한 투자, 즉 양육비용이 높아져 저출산 · 고령화가 발생
 - 국민생활 소비도 내수소비재 등 유형의 재화 구매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포화상태에 들어갔으므로 질적 차이가 수요의 동인
- 따라서 경제성장의 기본축이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이 질적 혁신으로 전환되고 있고 정책의 틀 또한 그에 적합하게 변형될 필요
 - 지금까지 성장동력이 지정되면 정책금융 혹은 세제감면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육성하였으나 더 이상 작동되기 어려운 방식
 - 벤처, 녹색성장, 미래 성장동력 등에 대한 자원투입 혹은 투자재원 마련을 위하여 정부지원이 이루어졌으나 향후에는 이러한 방식이 작동되기 어려울 것
 - 심한 경우, 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 지원 또는 부양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

- 정부의 정책적 대상은 기술, 지식, 서비스, 인적자원 등 무형자산의 신속하고 용이한 축적이 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흡수해 줄 경우 질적 혁신에 의한 성장이 가속될 수 있을 것임
 - 무형자산은 지적 재산권 행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비배타적 사용의 공유재 속성을 가짐.
 - 예로서 막대한 교육투자로부터 양성된 인적자원의 취업을 강제할 수 없음. 기초과학은 보편적 지식이라서 상업적 활용을 금지시킬 수 없음
 - 따라서 과거 제조업 혹은 산업화 시기의 성장동력을 육성하던 방식처럼 특정 부문을 집중 육성하기 어려움
 - 특정부문의 집중육성 혹은 불균형적 성장전략에서 탈피하여 공동체 사회를 대상으로한 공유재 육성으로 전환될 필요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하여 분야별 융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는 아직도 부문간 칸막이가 당연하고 필요한 경우 융복합으로 부문간 접목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해석됨
 - 그와 동시에 무형적 자산의 거래는 정부나 지원기관 등 제3자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당사자간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장경제적 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유형자산은 정형화되어 있어 제3자에 의한 측정이 용이하지만 무형자산은 그렇지 못하여 거래 당사자에 의존
 - 현재 경제혁신에서 가장 강조되는 규제개혁도 이러한 의미에서 해석될 필요.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피해집단 혹은 규제당국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음. 규제는 완화시키되 그 책임은 개별주체가 지게 해야 유효한 추진이 가능할 것임
- 무형자산에 의한 성장방식에서 파생되는 정책적 함의는 투입 중심의 정책지원에서 성과평가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
 - 유형자산에서는 외부 평가가 가능하고 투입이 그대로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투입의 확대에 정책을 집중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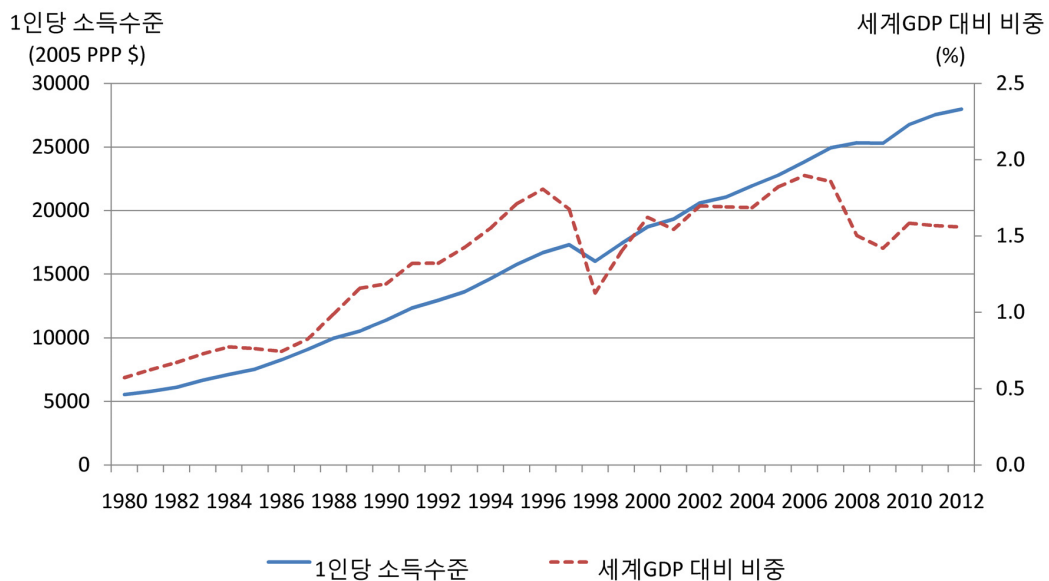
- 그러나 무형자산에서는 투입이 성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결과물(output) 혹은 성과 평가로 정책목표가 전환되어야 함
 - 교육 혹은 R&D에 아무리 자원을 투입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 혹은 성과가 비례적으로 나온다고 기대하기 어려움
- 무형자산에 의한 성장방식에서는 부분적 육성보다 전체적 정합성의 유지가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 요소
 - 무형자산에 대한 측정이 어려우므로 부문간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적 정책집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점검 및 평가이 부분적 정책단위의 추진와 함께 반드시 추진될 필요
 - (예) 서비스산업 v. 제조업, 녹색성장 v. 기존 굴뚝산업, 기초과학/원천기술 v. 산업기술
- 현재는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의 성장동력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로서 기존 체계의 해체를 두려워하는 이익집단들에 대한 유인 및 비전의 제시가 필요하며 동시에 무책임한 기존이익 고수에 대해서는 단호한 방향성 제시도 필요
 - 이익집단의 토론과 절충의 장이 될 수 있는 정책토론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정책토론회를 무산시키는 폭력행위 등이 금지되어야 함

한국경제 혁신 위한 정책방안; 토론자료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 경제추격연구소장

한국의 세계전체 GDP 에서의 비중: IMF 이후 2%밀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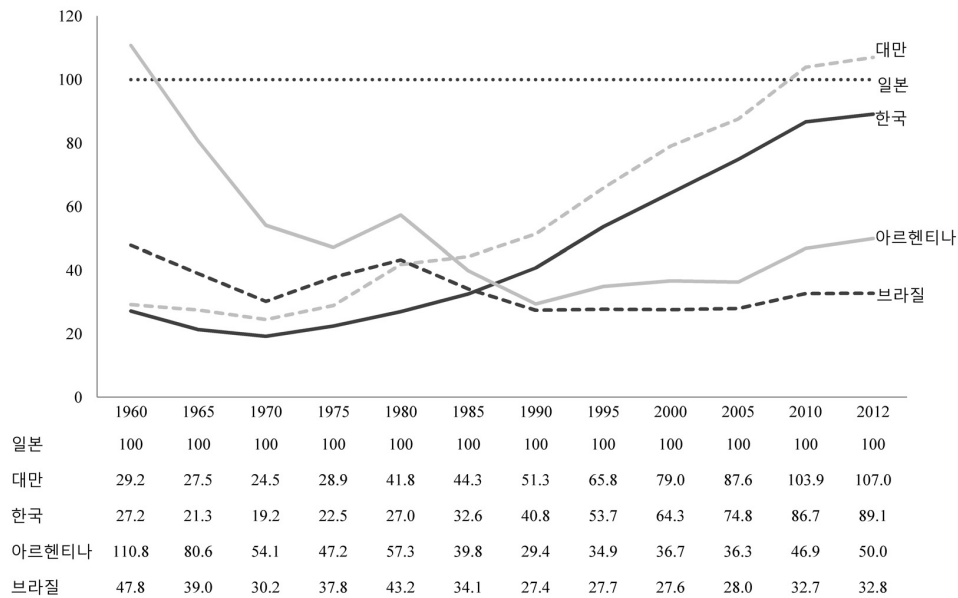
주: 한국의 세계대비 국내총생산 비중은 경상가격으로 계산됨.

slide 2

각국의 일본 대비 소득 수준

대만은 이미 일본 추월; 한국은 몇년째 일본 90% 수준 못넘어

일본의 1인당 소득수준
대비 % (PPP \$)



3

2012년 평균추격지수 : 주요 15개국

국가	평균추격지수		소득수준추격지수			경제규모추격지수		
	지수	순위	1인당 GDP (2005 PPP \$)	지수	순위	GDP 비중 (%)	지수	순위
미국	100	1	45,297	51	5	22.7	100	1
일본	47	4	31,412	35	20	8.3	37	3
독일	39	6	33,875	38	15	4.8	21	4
중국	39	7	7,933	8	71	11.5	51	2
영국	34	11	32,038	35	19	3.5	15	6
프랑스	33	13	30,922	34	22	3.7	16	5
이탈리아	27	18	26,118	29	27	2.8	12	3
대만	27	20	33,604	37	16	0.7	3	27
대한민국	25	24	27,991	31	24	1.6	7	15
러시아	19	31	15,347	16	46	2.8	12	8
브라질	16	38	10,292	11	61	3.2	14	7
멕시코	14	42	13,460	14	52	1.6	7	14
말레이시아	11	49	14,713	16	47	0.4	2	35
남아공	8	62	9,883	10	62	0.5	2	29
인도네시아	6	71	4,313	4	83	1.2	5	16

주: 순위는 100 개국 내에서의 순위를 의미함.

slide 4

왜 한국의 실질소득은 대만보다 못하나: 명목 일인GDP는 높으면서

- 답: 물가가 너무 높아서: PPP지수 불리
- -> 첫째 시사점:
- 경제정책: 물가 하향 안정에 신경써야
- 즉, 몇 개의 필요한 패러다임 전환:
 - 1) 수출 (성장율) 중심에서 고용(율)중심으로
 - 2)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물가) 중심으로;그런데 아직도 비효율적 생산자 보호 정책 남발:
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역효과

추격지수와 추격속도 지수

- **추격지수(Index of average Catch-up)**는 특정 국가의 절대적인 경제 추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이는 소득수준(income level)과 경제 규모(size) 라는 두 가지 100점 만점의 세부지수를 평균
 - **소득수준추격지수(Level catch-up)**는 특정 국가가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와 비교하여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수; 100만점의 점수임
 - **경제규모추격지수(Size catch-up)**는 특정 국가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가장 큰 나라 대비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지수임
- **추격속도지수(Index of average Catch-up speed)**는 특정 국가의 상대적인 경제추격의 속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이 역시 소득수준과 경제규모라는 두 측면의 100점 만점의 세부지수를 평균
 - **소득수준 추격속도지수(Level catch-up speed)**는 특정국의 1인당 GDP가 모든 나라 평균 대비 얼마나 빨리/늦게 증가하는지를, 상대적 연간 증가율로 보여주는 지수
 - **경제규모 추격속도지수(Size catch-up speed)**는 각국의 GDP 비중이 다른 나라들 평균대비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상대적 연간 증가율의 변화를 통해 보여주는 지수

slide 6

2012년 평균추격속도지수 : 한국과 주요 15개국

국가	평균추격속도지수		소득수준추격속도지수			경제규모추격속도지수		
	지수	순위	1인당 GDP 성장률 (%)	지수	순위	GDP 비중 성장률 (%)	지수	순위
중국	78	4	7.17	86	4	10.06	53	11
인도네시아	60	25	4.73	70	14	1.77	36	50
러시아	60	27	3.75	64	24	4.77	42	31
말레이시아	58	29	3.87	65	23	3.34	39	43
미국	51	41	2.05	53	40	2.51	38	47
멕시코	49	46	2.39	55	34	-0.57	31	58
일본	47	51	2.18	54	36	-0.91	31	60
대한민국	46	58	1.58	50	51	-0.65	31	59
대만	44	61	0.93	46	58	0.16	33	55
남아공	38	72	1.33	48	54	-6.35	20	75
영국	37	74	-0.64	36	79	-1.50	29	61
독일	35	77	0.73	45	63	-7.43	17	79
프랑스	30	81	-0.49	37	77	-7.99	16	83
브라질	28	83	0.00	40	73	-10.75	10	90
이탈리아	19	92	-2.68	23	91	-10.11	12	88

주: 순위는 100 개국 내에서의 순위를 의미함.

slide 7

2012년도 추격지수 결과

- 한국의 경제추격지수:
 - 01년 21점에서 07년 25점으로 꾸준히 상승 후,
 - 11년 25점으로 정체; 12년도 25점에서 정체;
 - 순위는 01년 30등, 2008년 26위, 2011년 25위, 2012년 24위.
- 추격속도지수는 2002년 71점 세계 11위 이후 일관되게 추락하여
2008년 10점 99위의 최저순위를 기록한 후 10년은 51점 23위로 상승
이후 다시 2012년 46점 (58위)으로 하락
- 한국의 추격속도지수가 일본에 비해 역전 당함;
 - 즉, 일인당소득 수준의 상승과 경제규모 증가 속도를 평균한 추격속도
지수에서 11년에는 한국이 일본에 앞섰으나 12년에는 역전;
 - 한국: 추격속도지수: 12년 46점 58위; 11년 38점 62위
 - 일본: 추격속도지수: 12년 47점 51위; 11년 28점 86위
 - > 일인소득증가율: 일 2.18% 한 1.58%
 - 경제규모증가율 일 -0.91% 한 -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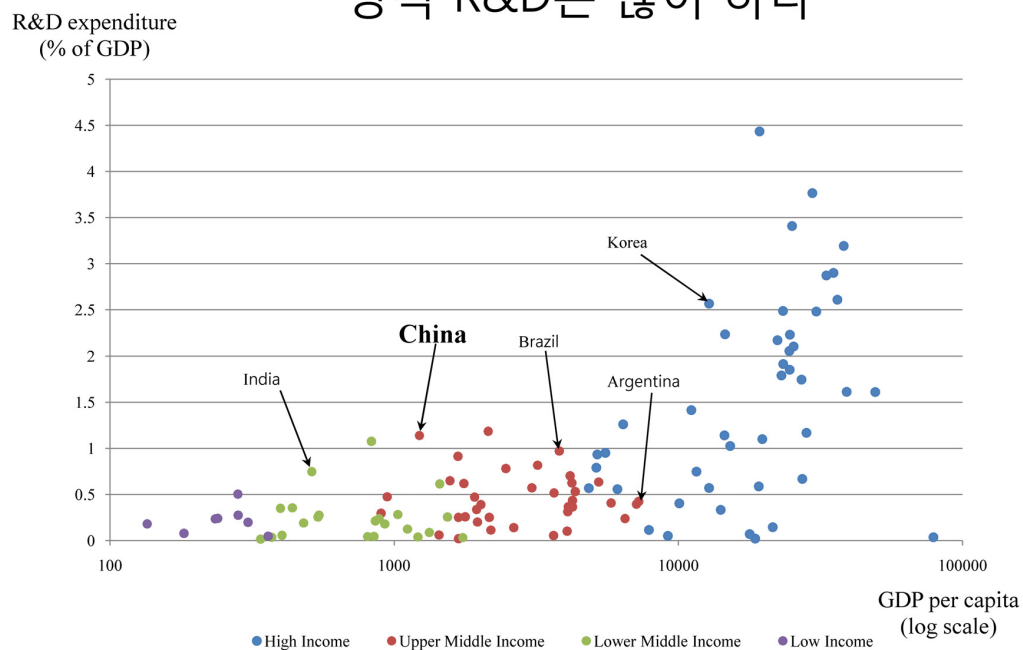
slide 8

4만불 달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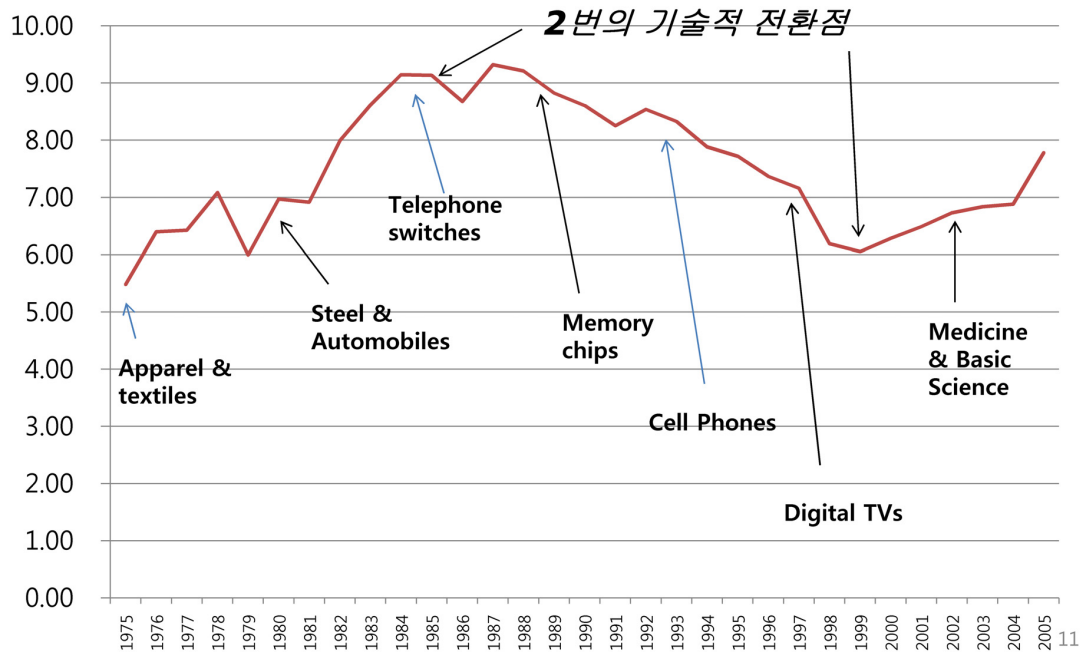
소득수준 추격의 완성 위해
지속적 혁신 필요:

혁신체제를
추격형에서 선진국형으로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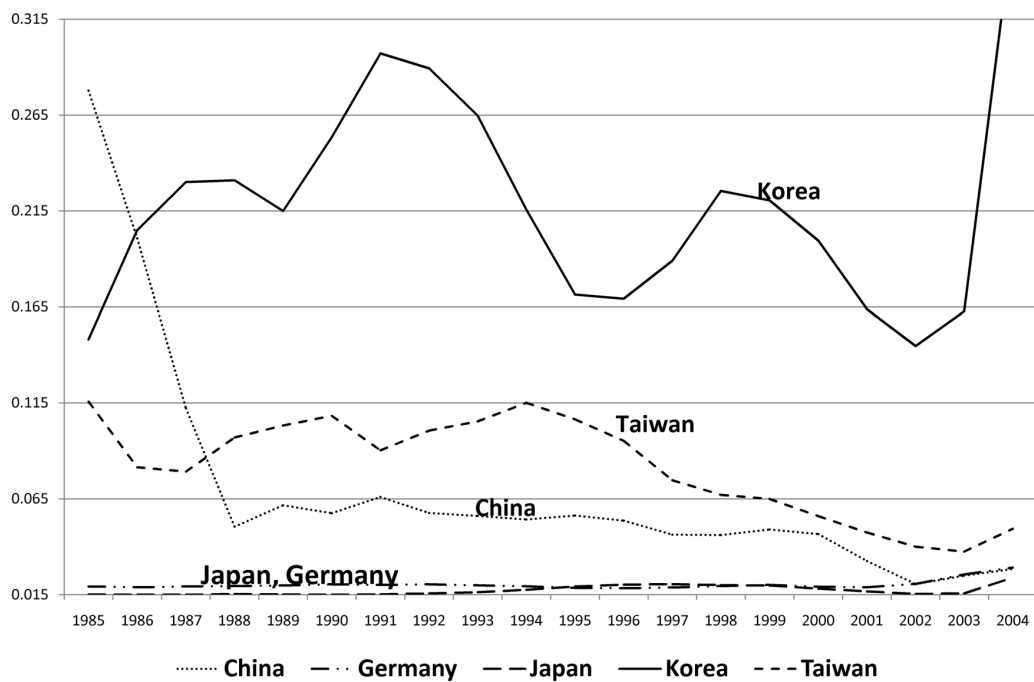
R&D/GDP ratios in China, Korea, India: 양적 R&D는 많이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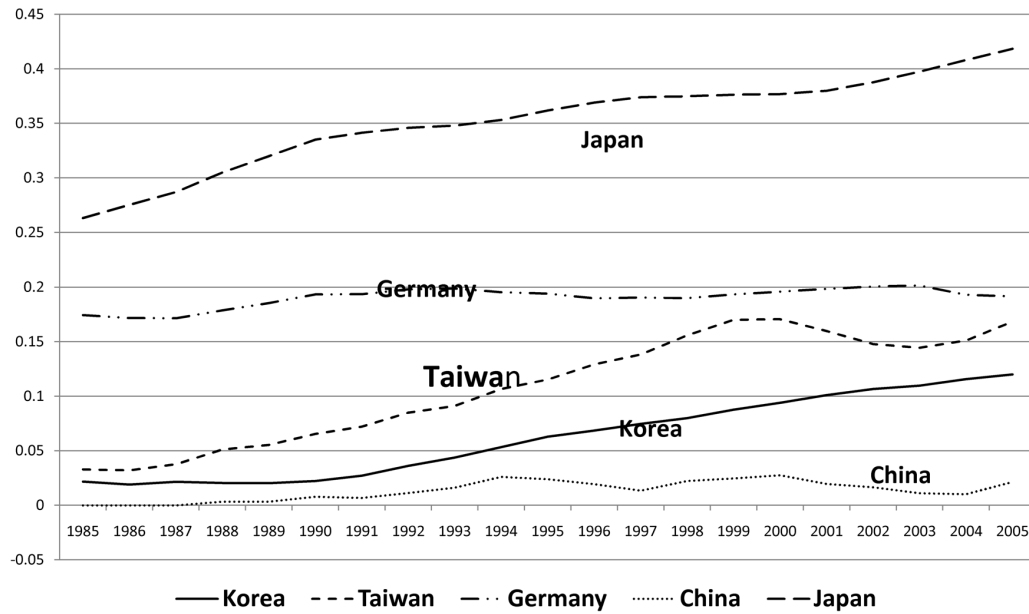
한국의 Detour = 2개의 기술적 전환점 통과:
 80중반 1차추격형 전환점 (수명 짧은 분야로 특화)
 2000년 이후, 선진국형 전환점 (수명 긴분야로 진입시작)



<혁신주체의 집중도 HH Index : 한국 과다 높음
 3 year moving aver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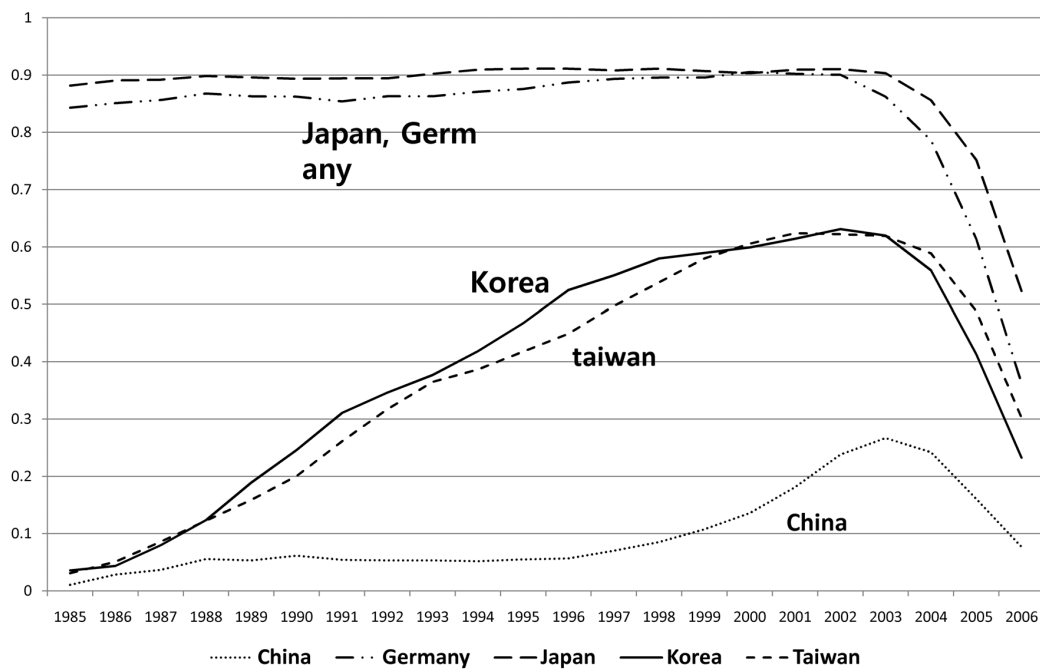


한국, 지식생산의 내재화 는 아직 낮음,
대기업중심성; 대만보다도 낮음
= localization of knowledge creation>



13

Technological Diversification 기술적다각화는 일본에 처짐:
No of sectors with patents/417



14

혁신체제 면에서 한국이 개선할 점: 국제비교 요약

한국은 그동안 8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과 차별되는 영역
즉 기술주기가 짧은 분야에 특화 및 계속 진입함으로써
소득 수준에서의 추격을 상당히 달성.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식생산의 내재화 및 기술다각화도 진행

그러나 이제 추격의 성숙단계에 들어가면서, 이전과는 반대로
기술주기가 긴 분야로도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미완성:
장기적으로 계속 진입 시도 필요: 중기적으로 IT와 융합분야로;

그 외, 지식생산의 내재화율, 및 기술다각화 수준도 더 높힐 필
요 있고, 과다한 집중도도 개선 필요;

이런 전환은 기존의 소수 대기업 주도의 혁신체제로는 어려움;
중소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참여 필요 (동반성장, 창조경제)

향후 한국의 혁신체제의 과제:

숨페터: 혁신 = new combination이라고 정의

창조경제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어디서 찾을까라고 생각하면 어렵
고, 기존의 것을 새롭게 결합하면 그 것이 창조

- 1) 한국경제의 그동안의 성장엔진 즉 잘나가는 부문을 (가령 대기업부문) 누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부분과 (중소기업) 새로운 관계하에 놓이도록 새로운
결합을 해 주면 되는 것 (기술적 집중도 개선)
- 2)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사간의 대타협이라는 노사의 new combination을 통
해 노동시간은 줄이되 (생산성은 높이고) 일자리를 늘려야 (혁신 내재화)
- 3) 다른 분야의 기술을 결합 융합함으로써 (fusion of technologies)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new combination이 필요 (기술다각화): IT와 BT, NT등 결합분야:
(긴 기술수명 분야 진출 전단계의 이행 전략)

창조경제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며, 그 수단은 new combination

3가지 혁신 정책 방안 = 세가지 new combination

대-중소기업간, 노사간, 다른 기술 (지식분야) 간 3 new combination. 16

감사합니다

www.keunlee.com

www.catch-up.org

(추격지수 다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미나 토론요지

김 종 석(홍익대학교 교수)

1. 공기업 개혁

[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

-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시정하라”
-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줄여라”
- “과도한 복지혜택을 축소하라”
-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

1. 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는 징벌적 개혁

- 잘못된 경영 관행과 부채 누적을 초래한 종래의 구조적이고 환경적 요인을 그대로 둔 채 과거로부터 누적된 비정상적인 증상만을 정상화하는 공기업 개혁은 일과성 대증요법으로서 다시 몇 년 후에 유사한 조치를 반복해야 할 것임.

- 불필요한 자산을 시한을 정해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헐값 매각 또는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음. 한국경제의 침체국면을 고려할 때 공기업들이 계획한 매각 계획은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할지 여부가 불확실 함.

- 코레일 파업 과정에서 민영화를 마치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정책으로 인식되도록 한 것은 향후 다른 분야 공기업 개혁에 제약 요인이 될 것임.

2. 잘못된 관행의 원인인 지배구조와 기업환경 요인을 개혁해야

-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공기업 종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행동해도 되도록 만든 관리체제와 기업환경 때문.

- 공기업의 관료적이고 피동적인 경영관행은 역설적으로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공기업 경영평가와 같은 중복되고 강압적인 감사와 획일적 평가 때문.

- 공익성, 효율성,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들은 역설적으로 민간기업 보다 더 고도의 창의력과 유연성, 자율성이 필요함에도 그동안의 공기업 정책은 성과보다는 절차, 효율 보다는 형평,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을 강조하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강압적인 규제를 반복하여 공기업의 창의력과 혁신의지를 약화시키고 주인의식의 상실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였음.

3. 지배구조의 개혁: 국영기업 지주회사의 설립

- 싱가포르의 테마섹 모델로서, 사업성 국영기업들을 자회사로 소유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주 회사의 이사회가 산하 공기업들의 임원을 임명하고, 공기업의 경영을 상시적으로 감시 감독함.
- 정부 부처가 공기업을 산하기관으로 오남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임원의 정치적 임명(소위 ‘낙하산’)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가지고 대통령과 국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 외국의 경우 공기업이 정부의 직접 통제로부터 멀어질수록 경영성치가 향상된다는 실증연구 결과도 있음.
- 공기업이 담당했던 공익기능은 정부와 공기업 간의 투명한 위탁계약에 의해서 수행하도록 함. 이를 통해 정부 예산 부족을 우회하기 위해 공기업의 부채를 통해 정부사업을 하는 관행을 억제하고 정부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

4. 공기업 기업환경의 개혁: 개방과 경쟁

- 공기업이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 또는 민간에게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비교 경쟁을 촉진 (해당 분야: 건설, 주택, 발전,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등)
- 경영권은 정부가 유지 하더라도, 공기업의 주식을 상장하여, 자본시장과 주주들의 기업 감시 기능을 활용하여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 도모. 현재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가 상장되어 있음.
- 가능한 한 공기업 기능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게 아웃소싱(out-sourcing)하여 인력증가와 비용 상승 요인을 제거.
- 정부 부처가 관행적으로 공기업에게 몰아주던 일감을 민간에게도 허용하여 정부 예산을 절약하고 비효율적인 공기업은 점차 일감이 소멸되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환경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2. 규제개혁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재구성한다.”
- “규제총량제를 도입해서 규제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
-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

1. 되풀이 되는 실패한 규제개혁 방식

-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겠다는 것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80년대에 실패한 것으로 증명된 모델. 이는 민간이 건의하고 관료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상향식’ 규제개혁 모델임.
- 규제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수단의 적정성을 규제집행 부서가 독립적인 평가기구에게 입증하도록 하는 ‘하향식’ 개혁이 필요함. 우리나라에 이러한 하향식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에 이미 마련되어 있고, 한국의 규제개혁 체계는 세계은행과 OECD에서 다른 나라에 권장하는 모범사례임.
-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취지는 규제개혁을 정부의 상설 기능으로 정착시켜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규제 담당 공무원을 견제하도록 <以官制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그동안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문제는 제도가 미비해서가 아니라, 존재하는 제도가 무력화됐기 때문.

2. 시스템에 의한 ‘집요한’ 규제개혁

-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 전담기구로 되어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법적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활성화 해야 함. 이명박정부에서 <경쟁력강화위원회>라는 강력하지만 법적근거가 없는 한시적인 조직이 규제개혁을 담당했던 것이 오히려 한계로 작용했음.
- 규제개혁위원회에 장관급 규제개혁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사무처를 그 산하에 두어 확대 강화하고 규제개혁을 경력으로 하는 전문 전담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배양해야 함. 규제개혁위원회를 전담하는 청와대 비서관을 지정하고, 대통령 주재의 보고대회를 정례화 하는 등 규제개혁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필요

3. 규제의 총량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을 관리해야

- 규제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를 적용하여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꾸준하고도 집요하게 규제 품질을 관리시키는 개혁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임 (규제 FLOW 관리).

- ‘규제개혁특별법’을 만들어 규제의 신설 강화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현존하는 모든 규제에 대해 3년 이내에 규제의 필요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규제개혁 특별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임 (규제 STOCK 관리).

- 일거에 규제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아파트 재건축하듯이 백지상태에서 규제를 재구성 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 방식. 한국 규제 문제의 본질은 수량이 아니라 품질임. 규제영향 평가제도(RIA)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규제의 신설 강화 단계에서 불량규제의 도입을 억제해야 함.

- 규제영향 평가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한국에도 RIA의 법적근거는 있으나, 그 시행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규제영향 분석보고서를 의명의 외부 관계 전문가들이 평가하도록 하여 무성의하거나 왜곡된 분석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규제가 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의무화 함.

한국 경제혁신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 자료

한국 경제학회

2014. 2. 13.(목)

이 종 화
고려대학교

한국 경제의 혁신과 지속 성장의 주요 과제

◆ 외기 대응 능력의 지속적 강화

- 외채, 외환시장, 외환 보유고 안정적 관리
- 민간 부채, 금융시장 등 국내 취약 요인 개선
-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

◆ 내수 · 수출의 균형 성장

- 대외 수출 안정 기반 확대(FTA), 수출 다변화
- 고용 창출 및 내수 확대
- 서비스산업의 구조개혁으로 안정적 성장토대 구축

◆ 성장 잠재력의 확대

- 인적 자본의 양적, 질적 확대 (여성고용, 교육 개혁)
- 연구 개발 투자의 확대와 첨단 기술의 개발
- 규제 개혁, 제도 혁신

◆ 포용적인 경제발전의 경제패러다임 구축

- 소득계층 간의 양극화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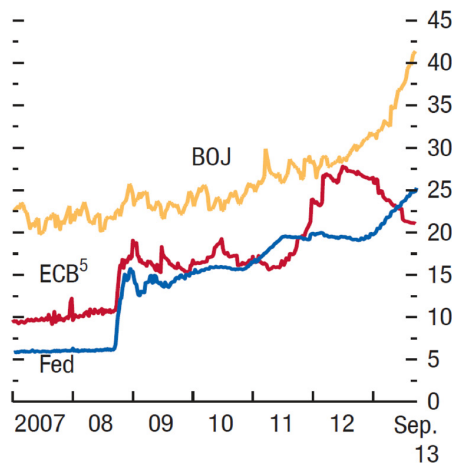
2

1. 위기 대응 강화

(1)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에 대비해야

- ◆ 양적완화 축소로 금융시장 불안 지속될 것에 대비
 - 최근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후 신흥국 주가하락, 환율 상승
 - 외환의 안정적 운용, 거시 건전성 정책, 국제공조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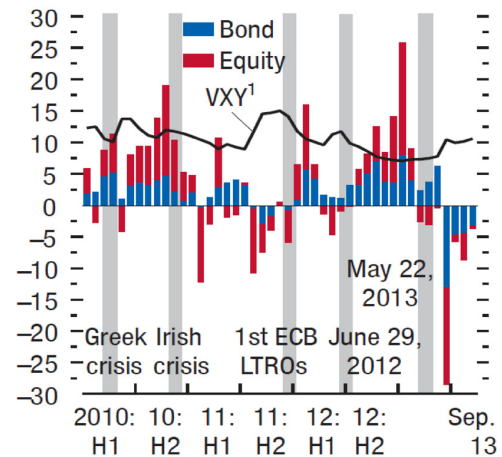
중앙은행의 총 자산
(2008년 GDP의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3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April 2013

신흥국으로의 자본 순유입

(billions of U.S. dollars; monthly flows)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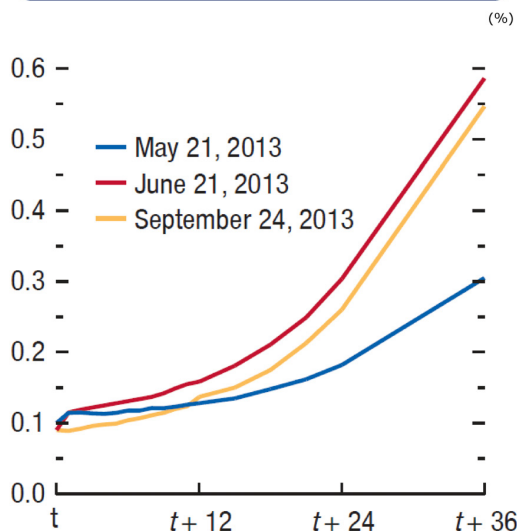
3

1. 위기 대응 강화

(2) 선진국의 출구전략과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 ◆ 양적완화 축소와 더불어 금리 상승 시 신흥국의 성장에 부정적 효과
 - 선진국의 민간 수요 부족, 기술 발전 둔화 등 장기적인 성장 둔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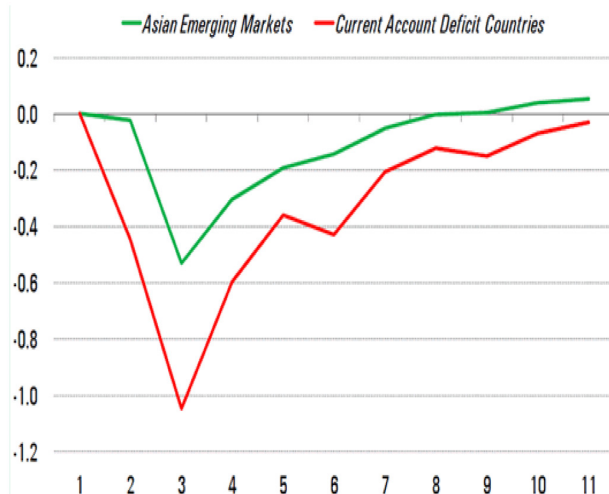
미 단기 정책금리의 시장 예측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3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100bp 증가의 효과

(Average impulse response across seven Asian emerging markets)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 October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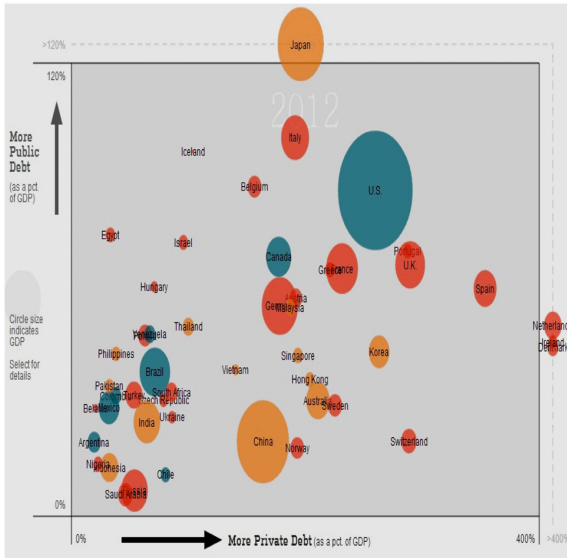
4

1. 위기 대응 강화

(3) 민간부채 축소 및 안정적 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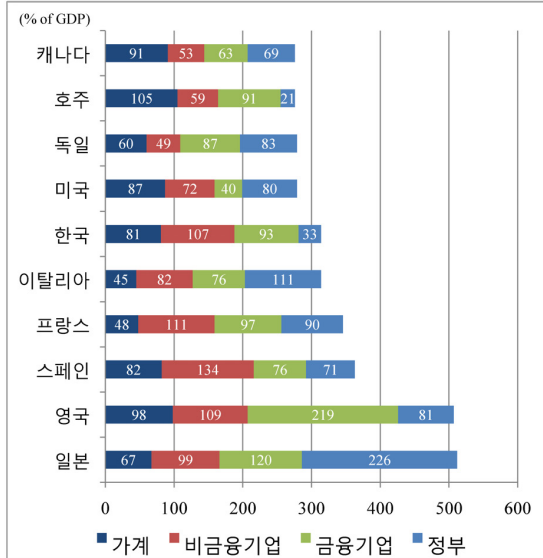
- ◆ 한국의 민간부채는 가처분소득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
 - 민간 부채의 축소, 공기업 부채 관리, 재정 건전성 유지 필요

부채 현황(2012년, GDP 대비 %)



주: 원의 크기는 GDP의 크기를 표시함
 자료: Andrew Garcia Phillips, Phil Izzo and Pat Minczeski, "Debt Dynamics," Wall Street Journal.
 (http://graphics.wsj.com/national-debts/#i%5B%5D=999) Original source from McKinsey Global Institute.

부채의 구성비율 국가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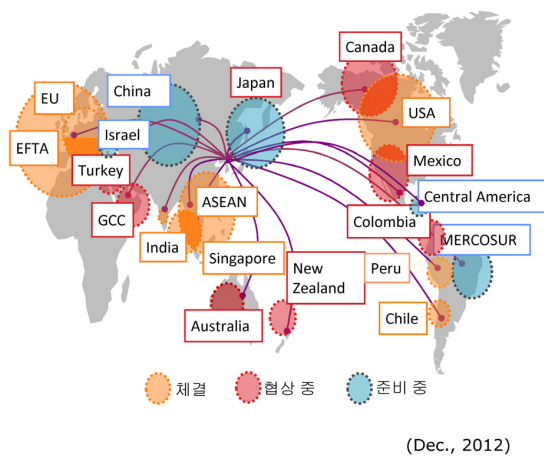


1. 위기 대응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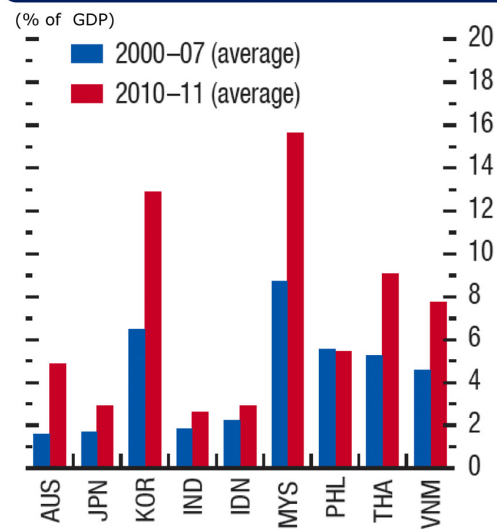
(4) 안정적 수출 시장 확보와 수출 경쟁력 향상

- ◆ 수출 시장의 안정적 확보 위한 FTA 전략 필요(TPP, TTIP, Japan-EU 등에 대비)
- ◆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엔화 절하에 따른 수출 시장 다변화, 경쟁력 향상 필요

한국의 FTA 네트워크



대 중국 수출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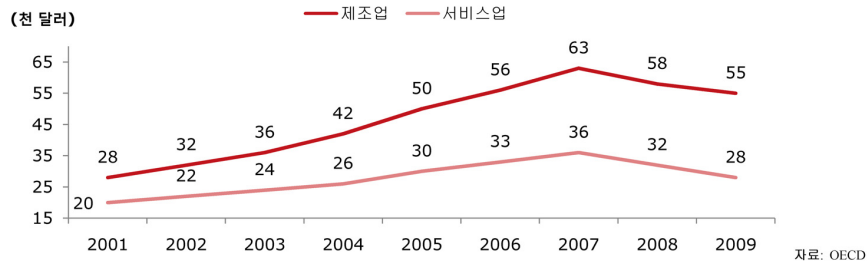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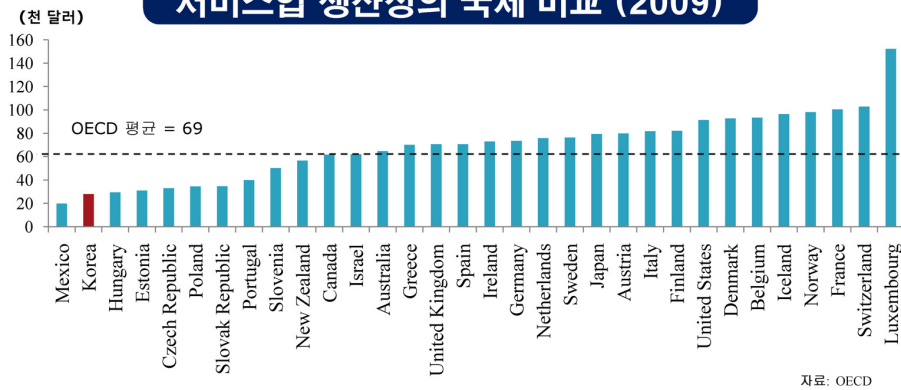
2. 서비스산업 개혁

(1)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

산업별 노동생산성 격차



서비스업 생산성의 국제 비교 (2009)



7

2. 서비스산업 개혁

(2) 취약한 서비스업종의 생산성 향상 필요

산업별 생산성 증가율의 국제 비교

노동생산성 (1990-2005, %)

	일본	한국	미국	영국
서비스업	1.0	1.1	1.5	1.9
도소매,음식,숙박업	1.1	1.8	3.2	2.1
운수,창고,통신업	1.3	6.0	3.2	4.3
금융,보험,부동산업	2.5	-5.2	1.3	1.9
커뮤니티,정부서비스업	0.2	-0.8	-0.2	0.4

총요소생산성 (1990-2006, %)

	일본	한국	미국	영국
서비스업	0.0	-0.9	0.1	0.4
도소매업	2.0	-1.9	2.9	1.3
음식,숙박업	-0.3	-5.0	0.1	-0.9
운수,창고,통신업	0.6	6.0	1.5	3.1
금융업	1.0	2.4	0.4	1.2
부동산,사업서비스업	-0.6	-2.3	-0.7	-0.2
공공 및 국방	-0.2	-1.8	-1	-1.0
교육서비스업	-0.4	-1.2	-1.4	-1.6
의료, 사회사업	0.1	-3.3	-1.3	0.6
기타 커뮤니티 서비스	-2.3	-2.3	0.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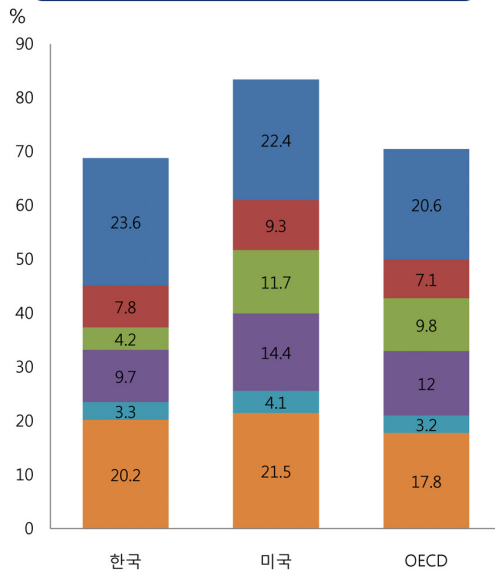
자료: EU KLEMS Database, KIP Database 에서 계산: Lee JW and W. McKibbin, Service Sector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in Asia (2013) 참조

8

2. 서비스산업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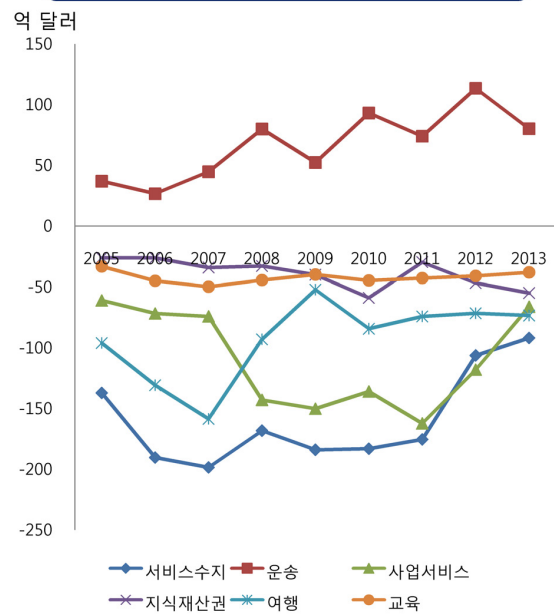
(3) 고급서비스업의 육성 및 서비스 수출 대책 필요

서비스업 고용비중 (2009)



자료: OECD

영역별 서비스수지 추이



*서비스수지에서 건설수지는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은행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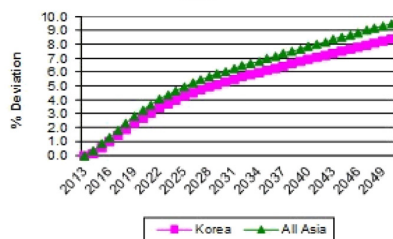
2. 서비스산업 개혁

(4) 서비스업이 경제 전체 성장의 원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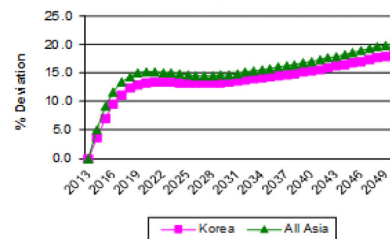
◆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추정

-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 2014-2053년 동안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1% 증가한 경우의 효과 추정
-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는 산업간 연관효과로 경제 전체에 파급, 균형성장과 지속성장에 중요한 역할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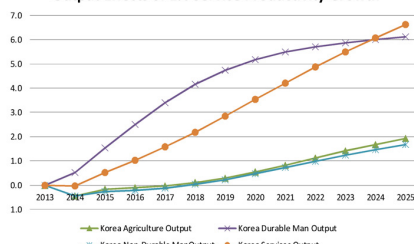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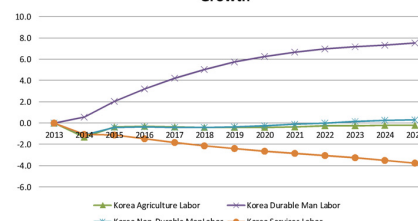
산업별 생산

Output Effects of 1% Service Productivity Growth



산업별 고용

Employment Effects of 1% Service Productivity Growth



자료: Lee and McKibbin, Service Sector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in Asia (2013)

10

[세션 II]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2014. 2.

토 론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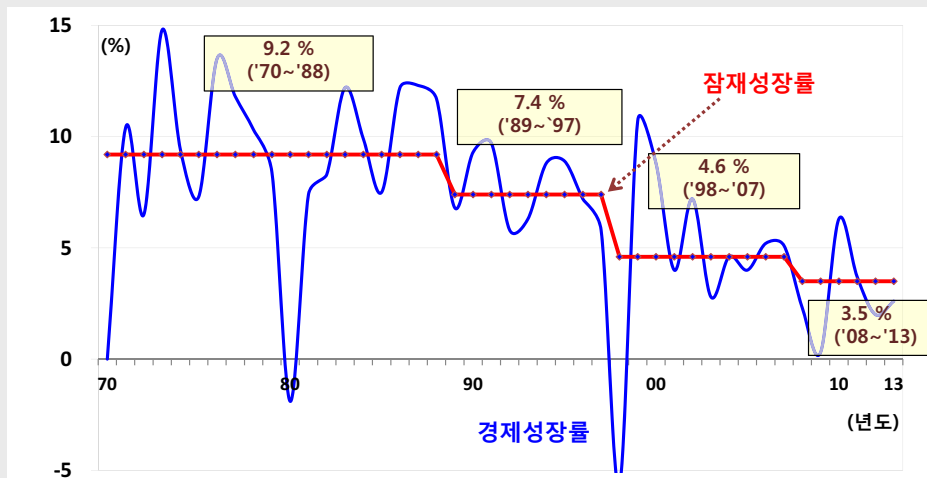
현대경제연구원
김 주 현 원 장

 HYUNDAI RESEARCH INSTITUTE

1. 내수 부진의 배경: 잠재성장률 하락

-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임

<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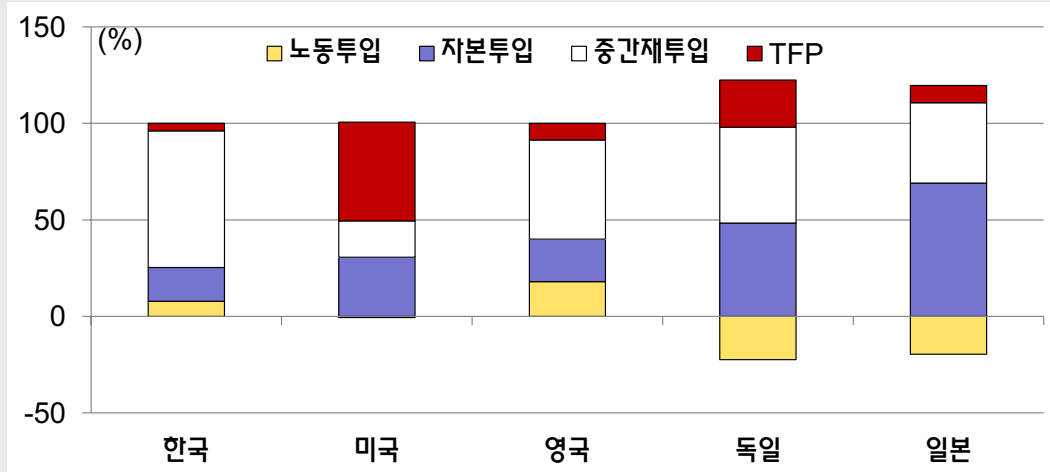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1. 내수 부진의 배경: 잠재성장을 하락(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 미약)

- 한국의 경제성장은 대부분 중간재 투입에 의존하는 구조
특히 경제의 효율성 또는 생산성을 나타내는 TFP의 기여율은 매우 낮은 편

< 주요국의 산출에 대한 생산요소별 기여율 (2000년대) >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주 1) 한국은 2001~2011년 기준. (2001~2005년 TFP의 산출기여율은 3.44)

2)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2001~2005년 기준

3

1. 내수 부진의 배경: 잠재성장을 하락(인구구조의 악화)

- 급격한 인구구조의 악화:
고령화사회(7%:2000년), 고령사회(14%:2018년), 초고령사회(20%:2026년)
-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2040년 1.42명으로 추정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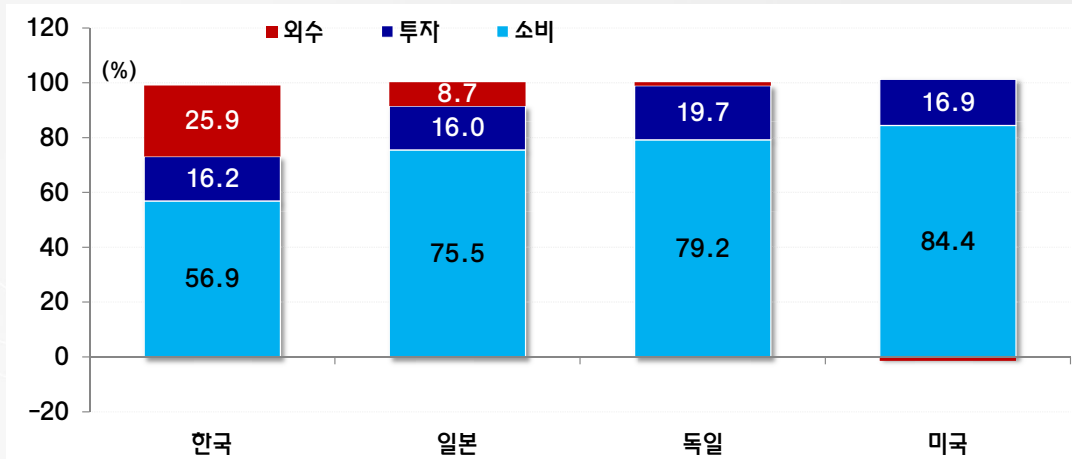
	2010	2030(p)	2050(p)
총인구(만명)	4,941	5,216	4,812
영유아 인구(%) (~14세)	16.1	12.6	9.9
생산가능인구(%) (15~64세)	72.8	63.1	52.7
고령인구(%) (65세~)	11.0	24.3	37.4



2. 내수 활성화 과제: 내수 부진 현황

-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 도달시 한국의 내수 기여율은 73%로 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 도달시 내외수 기여율 >



주 : 한국 07~13년(단, 09년 제외), 일본 87~92년, 독일 90~04년, 미국 88~97년 평균 값임.

Hyundai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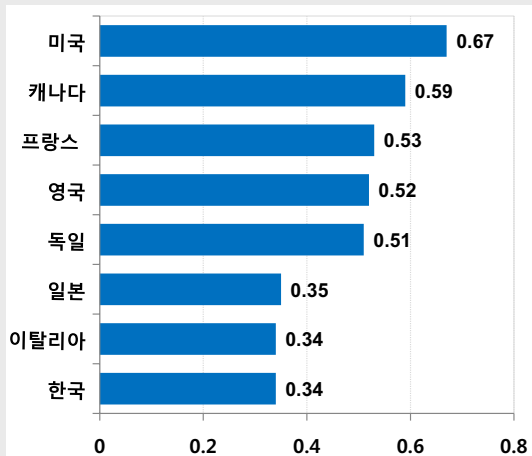
5



2. 내수 활성화 과제: 투자 활성화(기업가 정신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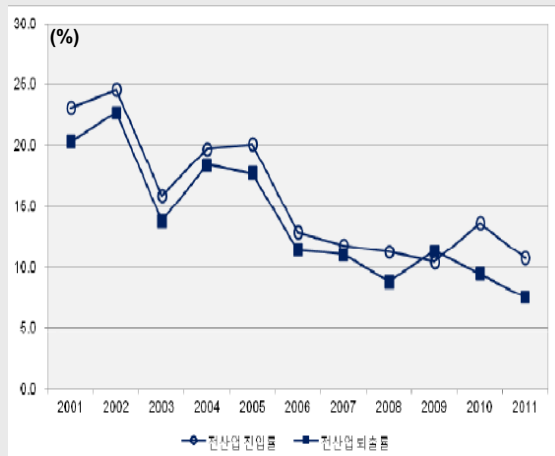
- 한국의 기업가정신지수 117개국중 37위: 미국(1위), 스웨덴&덴마크(2위), 호주(4위), 캐나다(5위) 순
- 기업 진입 및 퇴출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기업가 정신지수(GEDI, 2013년) >



자료: The 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stitute
주: 기업가 0~1 사이의 값을 가짐

< 기업의 진입 및 퇴출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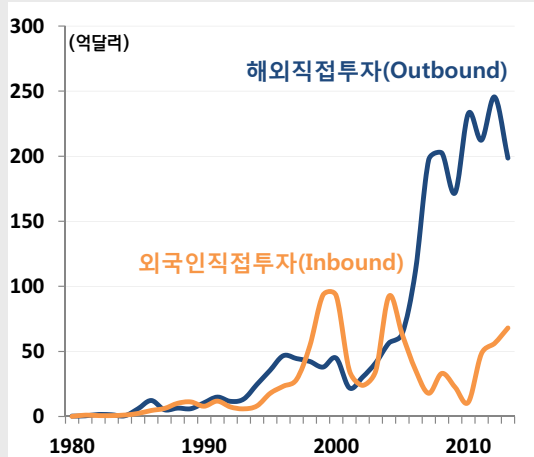
자료: KDI(2013), Structural Changes & Creative Destruction in the Korea Economy

6

2. 내수 활성화 과제: 투자 활성화 (투자 환경 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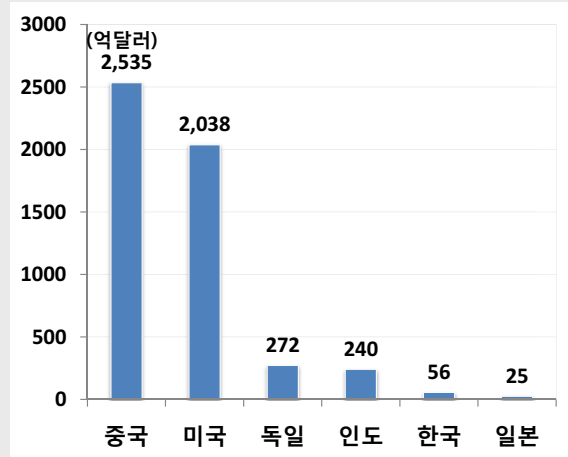
- 기업의 투자는 발생하나 해외투자 증가하는 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저조
- 투자환경을 비교하면 매력도 떨어짐(시장 & 공장, 지역HQ, R&D센터 등)

< FDI 해외 유출 및 국내 유입 규모 >



자료: 한국은행

<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 비교(2012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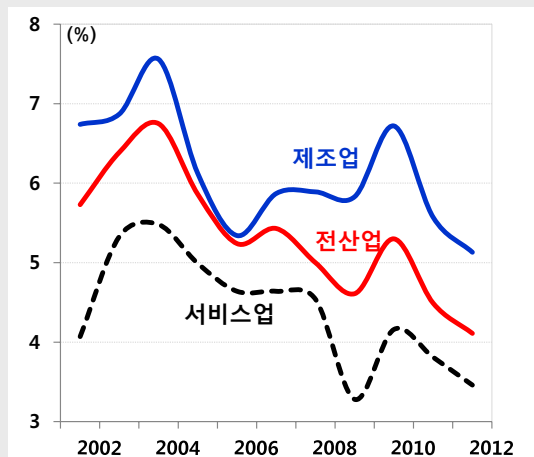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

7

2. 내수 활성화 과제: 투자 활성화(기업 수익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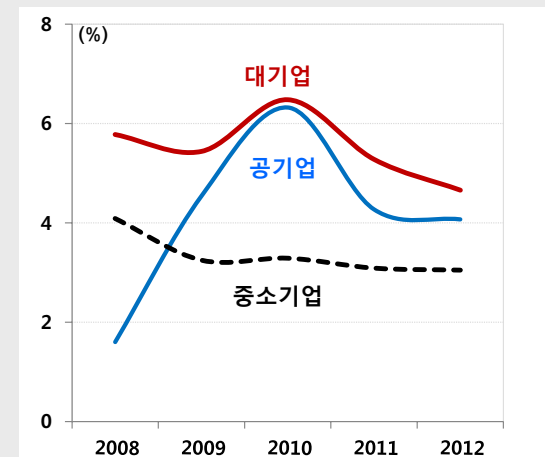
- 기업의 수익성은 지난 10년간 점진적 감소 추세임
-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업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고,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낮음

< 기업 영업이익률 >



자료: 한국은행,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공기업 및 일반기업 영업이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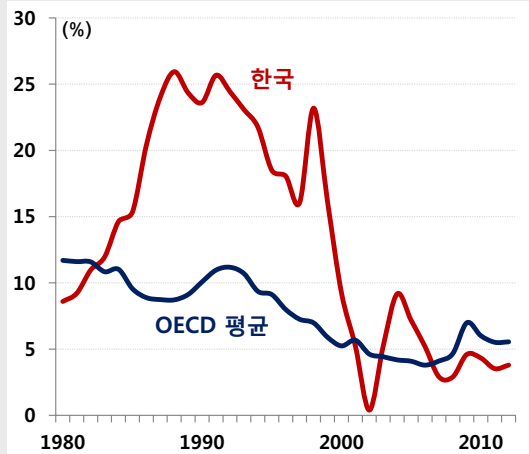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8

2. 내수 활성화 과제: 소비 여력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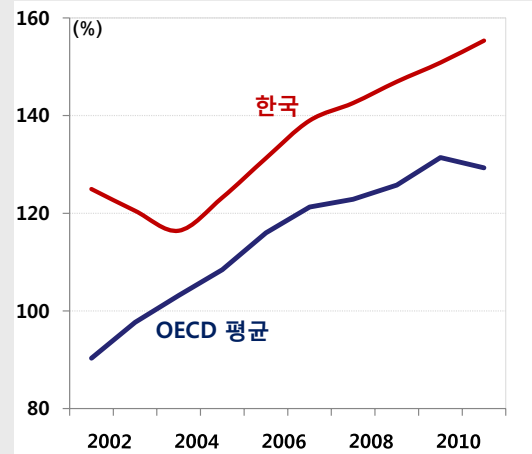
- 순저축률은 외환위기후 급락하여 한자리수로 낮아졌으며,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엔 5% 이하로 낮아졌고, 가계부채가 급증함

< 가계 순저축률 추이 >



자료: OECD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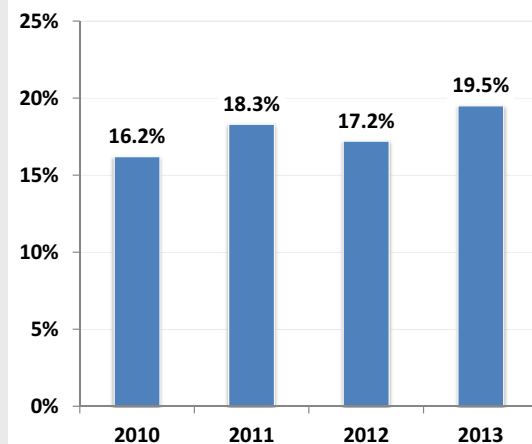
주: 1) OECD 가계부채는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를 포함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 비중과 다름
2) 한국은행,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3(상) 137%

9

2. 내수 활성화 과제: 소비 여력 확충(경직성 지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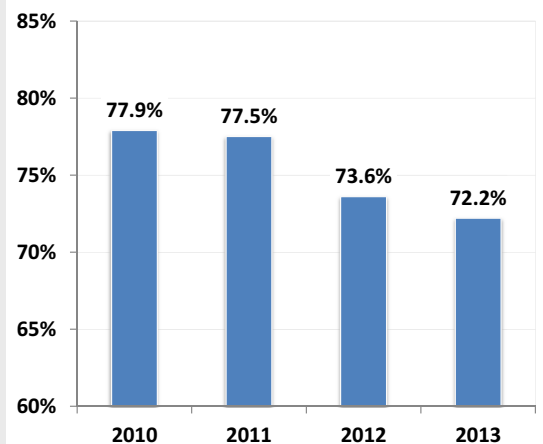
- 가계 채무상환비율의 상승: 16.2%('10)에서 19.5%('13)
- 가계 평균소비성향 하락 : 77.9%('10 3Q)에서 72.2%('13 3Q)

<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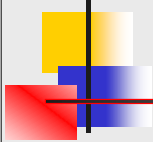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평균소비성향 >



자료: 통계청
주: 각 연도 3분기 기준.

10



2. 내수 활성화 과제: 내수 기반 확충

① 성장잠재력 확충

- 총요소생산성 제고(공공부문 효율성, 노사관계, 사회적 자본 등)
- 인구구조 악화 개선(합계 출산율 제고 등)

② 친투자환경 조성

- 투자 환경 경쟁력 제고(규제 혁신, 지식창조산업 인프라 구축)
- 기업 글로벌 경쟁력 지원(기초R&D, 전문인력)
- 지역간 투자 유치 경쟁 체제 도입

③ 소비기반 확충

-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하락 유도를 통한 구매력 확보
- 가계 경직성 지출 축소 유인 (사교육비, 주거비, 노인부양비)

11



2. 내수 활성화 과제: 내수 기반 확충

④ 내수 산업 활성화

- 유망신서비스 산업 육성(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 (온라인) 초국경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수출 진작
 - 예, 문화콘텐츠(음악, 게임, 드라마 등) 개발, 원격의료 확산, 사이버교육 확대
 - (오프라인) 관광 인프라 개선, 의료 및 교육 규제 개혁
- 서비스 산업 생산성 제고
 - 정보공유, 컨설팅 등을 통한 업종내 과당, 저가 경쟁 완화

⑤ 중소·중견 기업 생태계 조성

- 대·중소 협력체제 정착 지원 / 해외진출(정보, 마케팅) 지원
- 외국인 산업인력 활용 / 남북협력공단 활용 확대

12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토론 내용

중소기업연구원장 김동선

□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 저성장기조의 고착화 : 주력산업의 경쟁심화 및 인력구조의 노령화
 - 선진국과의 경쟁심화, 중국과의 격차축소 등 주력산업의 입지 약화
 - * 주요국과의 기술격차 :
(미국) 5.4년 뒤짐('10) → 4.7년 뒤짐('12), (EU) 4.5년 뒤짐('10) → 3.3년 뒤짐('12)
(일본) 3.8년 뒤짐('10) → 3.1년 뒤짐('12), (중국) 25년 앞섬('10) → 1.9년 앞섬('12)
 - 급속한 노령화 및 신규인력 유입 지연 등으로 산업현장의 노령화 진행 → 생산성 저하
 - * 제조업 취업자 평균연령 : 40.4세(2010년)
 - * 1970년 대비 2011년 고령화비율 속도 : OECD평균(1.5배) 한국은 3.7배
- 대·중소기업간 건전한 생태계 조성 미흡
 - 대·중소기업간 갈등구조 고착화 : 납품단가 문제, 기술탈취, 인력빼가기 등으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협업보다는 대립(갈등)이 부각되고 있음.
 - 생산요소(인력, 자본, 기술)의 대기업 쏠림현상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창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요원한 실정
-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지연
 - 제1차 벤처거품이 꺼진 후 새로운 벤처생태계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일자리창출 및 신산업 출현에 한계
 - 기존 제조업을 ICT와 융합을 통한 경쟁력제고도 어렵고 창조경제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도 어려운 상황 → 창조경제는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아젠다이지만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임

□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중소기업을 중심으로)

1) 중소-중견-대기업에 이르는 성장사다리 구축

-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안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수단 연계
-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적극지원
- 국가 R&D 예산배분의 조정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평가시스템을 수요자 위주로 개편
- 은행을 통한 정책자금의 융자위주에서 민간금융의 투자위주로 중소기업 자금체계를 개편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시스템 개편

2)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대응

- 리쇼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입지, 세제 등 지원 강화
- 핵심부품소재산업의 off-shoring 억제를 위한 규제 완화
-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인력 활용 및 업종별 대북투자계획 수립

3)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 활성화

- 디자인, 연구개발서비스업, 시험분석, 인증시스템 정비 → 이들 분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존재하며,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

3) 산업현장의 고령화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 산업현장 고령화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고령인력의 스킬전수사업 실시(특성화고교/마이스터고 졸업생과의 멘토링)

4)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대한 국민적 합의

- 비정규직의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기업/노조/중소기업 간 사회적 합의 도출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향상, 계속교육 강화 →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 수립)

5) 창조경제 기반 조성 및 가시적인 성과 확산

- 창조경제 관련사업의 효율성 점검 및 효율적 조정체계 수립
 - 창조경제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를 새롭게 설정하여 기존 정책과의 중복성을 피하고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 : 창조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전달체계 재정비, 우선순위 조정,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을 피하고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
 - 관련부처간의 업무 및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조정이 필요
 - 창조경제 관련 지원기관, 연구소, 협회 등의 역할 분담 및 협력모델 개발 · 성공사례 확산
- 제조업과 ICT와의 융합을 통한 업그레이드전략
 - 창조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조업등 전통산업의 경쟁력강화로 설정하고 전략으로는 기존 제조업과 ICT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경쟁력 확보
 - 빅데이터 활용, 3D 프린팅,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기술창업 영역의 확대
 - 농업, 어업, 국방, 방재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한 이들 산업분야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이를 통해 창조경제가 국민의 불편 및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

6)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경영여건 개선

- 빅데이터 활용기반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활용도 제고
-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IT기술 활용을 위한 솔루션 개발 및 보급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기업의 협력모델 창출 및 확산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서민금융체제 개편 및 사회적기업모델 확산

7) 조기은퇴자 및 미취업 청년 인력의 활용도 제고

-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선취업후진학시스템의 확산
- 조기은퇴자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중소중견기업과의 매칭
- 인력난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부여

한국경제 혁신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

윤창현(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기본 목표 :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그리고 일인당 소득 4만불 시대에의 진입

■ 2014년 상황에 대한 전망

- 선진국 : 2013년 1.2%에서 2014년은 2.0%로 증가
- 미국경제는 1.6%에서 2.6%로, 유럽은 2013년 -0.4%에서 2014년은 1.0%로 증가할 전망이다
바 주목할 만한 것은 2014년 유럽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종지부를 찍고 플러스 성장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 그리스의 경우 2013년 -4.2%에서 2014년은 +0.6%로 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유럽경제는 2013년이 바닥이 되는 셈이며 2014년부터는 본격적 회복이 시작.
- 신흥국의 경우 2013년 4.5%에서 2014년 5.1%까지 성장률이 상승할 전망
- 일본의 경우 소비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3년 2.0%에서 2014년 1.2%로 성장률이 다소 감소할 전망
- 중국의 경우 리커노믹스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13년 7.7%에서 2014년 7.3%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임.
- IMF는 2014년 경제예측을 하면서 큰 화두를 “전환과 긴장”(Transition and Tension)으로 제시하였는데 선진국은 방향의 ‘전환’이 일어날 정도이지만 신흥국은 경제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는 데에 따른 ‘긴장’이 예상된다.

■ 2014년 한국경제 전망

- 금융연구원의 2014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0% 인바 2013년의 2.8% 대비 성장률이 증가하면서 최근의 부진함을 뒤로 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민간소비의 경우 증가율이 2013년 2.2%에서 2014년 3.2%로 증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수준이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내수부문의 확장세가 피부로 느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건설투자 증가율의 경우 4.1%에서 2.2%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임
- 반면 설비투자증가율은 2.4%에서 7.5%로 뛰어 오르고 수출도 증가율이 5.4%에서 6.7%로 증가하면서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임.
-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3년의 707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530억 달러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라서 외환부문 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임.

■ 금융산업에 있어서 다양한 과제가 추진되어야 함

■ 금융 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

- 최근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일대 수술에 가까운 조치

가 필요.

- ‘금융기관이 돈을 벌어 뭐하냐’는 식의 극단적이고 비관적인 비판론까지 제기
-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손실로 처리한 대손상각액은 8조 여원에 달했는데 이는 가계대출 연체액 4조여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였고 2012년의 경우 2.1조원 2013년 상반기는 1.2조원을 상각처리
-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부실처리를 제대로 못하면 정상적 대출을 회수하려 들것이고 갑자기 대출상환을 요구받은 차주들이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부채상환을 시도할 경우 매물 증가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마비되면서 경제에 커다란 주름살이 드리울 수도 있음.

■ 금융기관 규제강화와 완화에 대한 적절한 믹스가 필요

- 바젤3 조치가 시행되는 등 은행의 자기자본 요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은행의 수익성에 경보가 울리고 있고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등 대부분의 금융 분야가 힘든 투쟁을 벌이면서 수익성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음
- 구조조정과 부실처리에 수반되는 채무재조정과 부실채권 상각을 위해서는 수익성을 확보하여 멧집을 길러야 함.

■ 자본시장 역할에 대한 재정립

- 자본시장은 투자자가 위험을 감내하면서 증권을 매입하게 되므로 은행에 비해서 부담이 다소 적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금이 필요한 회사들이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잘 형성되도록 하는 시장조성의 역할을 증권사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들의 건전성과 수익성도 매우 중요함.
- 평소에 적절한 이익을 내고 이를 잘 쌓으면서 자금력을 갖추고 있어야 중요한 순간에 시장조성의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곳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
- 보험사의 경우도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여 잘 운용하면서 일정한 조건이 만족될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회사의 역할 또한 금융시장 내에서 막중함.

■ 금융권의 해외진출을 통한 신규시장 개척

- 국내 금융산업은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하지만 문제는 해외시장도 이미 주요기관들이 진출한 상황이므로 뒤늦게 뛰어들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됨
- 그러나 국내시장과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시장이라는 점에서 다각화의 관점을 가지고 신중하면서도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새로운 먹거리 창조를 위한 모험자본 형성

-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사다리펀드 등의 모험자본 이외에도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펀드가 조성되면서 민관협력 차원에서 창조경제달성을 위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금융권에서 이의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10-10-밸류업’의 추진

- 정부가 금융산업발전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인데 이 방안에는 3C라는 어

젠다가 포함됨

- 경쟁(Competition)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 그리고 융합(Convergence) 라는 세 개의 C를 제시하면서 향후 금융이 나아갈 바를 지적함
-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는 경우 상당한 변화와 혁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종 과제의 중요성이 부각

- 현재 대기업 부문 내에서도 상당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이외에는 매우 힘든 상황임
- 건설 해운 조선 철강등의 산업은 매우 힘들어 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 작업까지도 진행
- 동양그룹의 경우 은행중심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여 은행대출을 갚아버림으로써 주채무계열에서 탈퇴를 하였는데 결국 자체 구조조정에 실패하였고 많은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짐.
- 다른 기업들도 동양의 사례를 잘 분석하여 구조조정 작업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등 금융기관도 큰 그림을 가지고 적절한 작업을 진행시켜야 함.
-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만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관-시장-기업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서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이 역할을 해야함.

■ 금융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화사회의 빅데이터 시대에 대한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

-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매우 고조된 상황인 바 이러한 정보공개에 대해 지나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경우 정보화사회와 빅데이터 시대에 대한 대비가 지연되거나 소홀해 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두가지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정책을 추진해야 함.

■ 2014년도가 경기고점이 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

- 우리나라 경기의 확장기는 평균 31개월 정도인데 최근의 저점은 2012년 9월 근처로 파악 됨.
- 확장기의 평균 길이를 감안하면 경기고점은 2015년 초가 될 가능성이 큰바 2014년에 따듯해지는 상황을 경험한 후 다시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함.
- 2014년 경제정책은 이러한 면을 감안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바 안정책을 너무 오래 쓰다가 부양책을 써야할 시점을 놓치게 되면 정책의 유연성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정책 타이밍에 신경을 써야 함.

■ 자영업에 대한 적절한 대응

- 이 과제들은 단 시간에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며 그럴수록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함.
- 부동산가격하락은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내수악화를 통해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는데 이 경우 금융권이 제대로 버티지 못하는 경우 전체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해야 함.

- 자영업의 경우 약 700여 만명이 레드오션에 가까운 분야에서 힘들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 자영업의 경우 1인당 평균 1억원에 가까운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 분야의 부실은 금융부실로 직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함
- 이 문제를 위한 금융권의 역할을 막중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처방이 계속해서 제시되어야 함.

■ 가계소득 비중 감소에 대한 대응

- 가계 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바 1990년대 약 70%였던 가계소득비율이 60%까지 줄어들었음.

■ 가계부채 관련 대책의 필요성.

- 10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보이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인바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 다만 이는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복합적 처방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가야.

■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

- 부동산의 투기재로서의 역할이 끝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이 필수재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각종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함.
- 양도세 중과 등을 비롯하여 투기재적 시각에 맞추어 정립된 제도에 대한 일대 수술이 필요하고 부동산도 재화인 만큼 물가상승률 정도의 가격상승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 시세 상승률 목표제에 가까운 정책을 통해 적절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함.

■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산업에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

- 노령화로 인한 저축증대가 소비에 대한 제약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노령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정비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마음 놓고 소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
- 특히 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바 노년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노력을 최대한 장려함으로써 국가는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개인연금 등에 대한 유인체계를 강화하여 스스로 노년을 준비하는 규모와 비율을 최대한 늘려야 함.

■ 소득국가에서 자산국가로의 전환이 필수적.

- 일본이 무역적자를 내면서도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과거에 취득한 막대한 해외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과 이자 덕분인바 우리도 본격적인 노령화가 진행되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벌어들이는 외화를 잘 이용하여 전 세계에 다양한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쌓여있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증대시켜야 함.

경제혁신 정책세미나 토론요지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1. 비정상상의 정상화

□ 공기업부문 외에도 경제시스템 전반을 정상화

- 불법복제, 위조상품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여전
- 근로자 파업시 사업장 안에서 점거농성하는 것도 선진국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

□ 자원배분시스템 작동현황 점검, 정상화

- 시대가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주입식 교육 여전
→ 맥락이해·문제해결형 입시제도 확립 시급
-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 구인난 연공서열형 임금체제도 문제
→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방안 마련해야
- 시중부동자금이 700조원 달하지만 자금순환은 가계대출 위주
→ 벤처·창업부문 투자촉진, 금융-산업간 공조강화 필요
- 국토의 70%가 산지 → 토지이용규제 탄력적용해야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경쟁·협력관계 개선

- 시장에서 공기업과 경쟁하는 민간업체에 공정경쟁여건 조성
 - 우체국택배의 경우 정부예산으로 지역거점마다 대규모 물류시설 투자에 나서고, 택배차량 이용규제도 받지 않음. 적자를 내면서도 저가수수료 고수 → 민간택배사 이중고

- LH공사 행복주택 공급으로 민간 주택업자의 어려움 가중
- 도로공사 도로만 부가가치세 면제. 민자도로는 부과대상
- 공공부문의 공사발주·납품관련 관행·제도 개선
 - 관급공사 입찰시 결과를 공개않고 유찰사실만 통보한 후 재입찰에 부치는 등 입찰관행의 문제 상존
 - 발주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되고 민원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부담
 - 제조업체가 납품기한을 어길시 외국업체에 대한 경우(10% 상한)와 달리 무한대의 지체상금 부과

2. 규제개혁

□ 규제총량제 도입방향

- 규제개선을 많이 하는데도 규제총량은 계속 증가
 - 12,887건(09)→13,405(10)→14,078(11)→14,885(12)→15,065(13)
- 규제총량제 시행은 바람직하나 one in - one out으로는 한계
 - 重부담규제를 도입하고 輕부담규제를 완화할 가능성
 - 영국에서는 지난해부터 one in - two out 시행
- 건수에 의한 총량관리보다 규제부담 총량관리 바람직
 - 규제신설에 따른 부담 등 규제영향을 평가해 규제부담이 늘어난 만큼 줄이도록 해야 규제체감도 개선 가능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절차 도입

- 규제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원입법사례 빈번
- 최근 도입된 환경관련규제의 경우 규제영향에 대한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입(화평법, 화관법 등)
-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규제위 심의가 면제되는 때문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처럼 우리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제도화할 필요

3.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 서비스산업 육성의 공감대는 형성. 각론상 규제개선 지지부진

- 노무현 대통령도 의사들이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라며 영리병원 허용의 필요성 역설 그러나 한미FTA 비준과정에서 국민오해 증폭.
 - 최근 정부가 자법인의 비의료 부대사업 통한 영리사업 허용방침을 밝혔지만 실행여부 불투명
- 의료, 교육, 법률 등의 전문서비스들이 공익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규제완화에 어려움
- 서비스 분야의 각종 규제가 정말 공익보호기능을 하는지 기득권 보호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규제를 완화하면 정말 공익이 무너지는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소통이 필요
- 정부가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이해집단이 반발하고, 국회가 법을 고치지 않으면 플랜에 그치고 마는 것이 현실
- 서비스부문 개혁의 경우처럼 실행이 쉽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3개년계획에 실행을 위한 액션플랜도 함께 마련할 필요

□ 제조업과 서비스산업간 상승발전

- 중소기업들의 경우 R&D는 물론 각종 규제절차 준수, 지원제도 활용 등에 관해 많은 어려움
- 이런 부문에 대한 컨설팅산업을 발전시킨다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고급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의 다목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R&D서비스산업, 중소기업 컨설팅서비스산업 등 중점육성 요망